

주요 언론보도

[2016.10.6(목) 언론협력담당관]

☐ TV 방송

○ K B S

- 경기도, 쌀 수급 안정 대책 추진 (뉴스광장 경인)
- 경기·인천 '재난 상황실 36%' 내진 설계 취약 (뉴스광장 경인)
- 도 퇴직공무원 59명, 신하공공기관 재취업 (뉴스7 경인)
- "경기도 소방차 5분 이내 도착 37% 불과" (뉴스7 경인)
- 경기도·경기 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 (뉴스7 경인, 뉴스9 경인)

○ M B C

- 야당,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집중 질타 (이브닝뉴스)

○ O B S

- 강득구 부지사 취임, 경기도 2기 연정 스타트 (뉴스745)
- 경기도 산하기관 '관피아' 5년간 17곳에 59명 (경인투데이)
- '경기도 국감' 화두는 대권 행보...연정·핵무장 질의 (뉴스 M, 경인뉴스라인)
- 경기 소방차 5분 내 현장 도착률 37%...전국 최하위 (뉴스 M)
- 아동 학대·실종 경기도 '최다'...연계 수사 절실 (뉴스 M, 경인뉴스라인)

○ 채널A

- "언제 출마하세요?" 잠룡들 대선 검증 청문회 (종합뉴스)

○ M B N

-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공식 취임 (전국네트워크)

○ Y T N

- 대선주자 검증 무대로 변질된 국정감사

○ 연합뉴스 TV

- 국감에 싱크탱크·팬클럽까지...대권행보 '가열' (출발640)

☐ 라디오 방송

○ C B S

- 냉동베리,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
- 경기도농기원, 내일 코엑스서 선인장페스티벌

○ 경기방송

- [국감] 경기도 국감 與野 의원 다른 사선

○ 경인방송

- (국감)경기도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심각'
- (국감)경기도-시군 재난대책본부 36% 내진설계 안돼..."충체적 점검 필요"
- (국감)경기도, 부실한 소방관 공기충전기 전국 '최다'
- (국감)경기도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총부채 7조6천억 원
- (국감)경기도, 관변단체 3곳에 예산 중복지원..작년보다 2배 증가
- (국감)경기도 운영 앱 중 1만명 이상 사용은 단 2개 불과
- (국감)판교IV 연구용지 IT기업 연간 593억 부당 임대수익 챙겨
- (국감)경기도 저수지 10곳 중 4곳 농업용수로도 사용 '불가'

□ 중 앙 지

○ 조선일보

- 대선주자들 양극화 해법 담는 '성장론' 경쟁

○ 동아일보

- 원예 노하우 배우고 미니화분 만들어보세요

○ 국민일보

- '5000만원 귀하신 몸'... 안성서 비단잉어 품평회

○ 한겨레신문

- 남경필 지사 "대선출마 내년초 결정"

○ 경향신문

- 불(不)에 주목하는 대선 주자들

○ 한국일보

- "모병제 우려" 남경필에도 대선 청문회

○ 세계일보

- 여권 잠룡 남경필 검증장 된 '안행위 국감'

○ 서울신문

- 남경필 “軍미필 공천 배제해야”

□ 경 제 지

○ 매일경제

- 광주 찍고 충청 찍고... '콩밭'에 마음 뺏긴 지자체장

○ 서울경제

- 남경필 "핵무장 준비론은 미래 위해 논의하자는 것"
- 9일 안성서 전국 유일 '비단잉어 품평회' 열려
- 경기농기원 '선인장페스티벌' 서울 코엑스서 개최
-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냉동베리 잔류농약 모니터링

○ 한국경제

- 선인장페스티벌, 6~10일 코엑스서
- 평택시의 '캔 장학금'
- 경기도, 남한산성박물관 짓는다

○ 머니투데이

- “국회가 정치 못한다고 법원이 정치하면 되나?”

○ 파이낸셜뉴스

- 남경필 경기도지사예 대권 도전 여부 질문 쇄도
- 여야 지자체 잠룡들 국감서 '몸값 올리기' 주력
- 경기도 내진설계 주택 10곳 중 1곳뿐... 서울 절반도 안돼
- 경기도 공무원 18.8일에 한번 꼴 4대범죄 저질러

○ 전자신문

- "판교기업, 부당임대로 年 600억원 이득" 질타

□ 지 방 지

○ 경인일보

- 도내 주택 87% '지진 무방비' 대책 시급
- "남지사, 국무회의 참석 道 문제해결 나서야"
- 김진표 "국방부, 지역갈등 부담 소극적"
- 道 산하기관 '관피아' 심각

- 대권 잠룡 '정치 국감'
- 모병제·핵무장... 南 '대권행보 발언' 겨냥
- 道경계정책과장 거친 행정통
- [발언대]농자천하지근본(農者天下之根本)
- [사설]道, 도대체 체납관리 어떻게 했길래 ...

○ 경기일보

- 결국 '남경필 국감'
- "생활 속 꽃 소비로 김영란법 이기자"
- 저수지 10곳중 4.5곳 '수질 비상'
- 道 공공기관 '통·폐합' 용두사미
- '냉동베리' 대부분 잔류농약 안전
- "연정 통해 도민이 행복한 道 만들 것"
- 장정숙 의원, 특정 부서 비하 발언 눈총
- 접경지역 지원쥬네브 사태... 의원들 '지역현안 챙기기' 사활
- 박순자 "道 미세먼지 너무 높아 걱정" 남다른 애정
- "수원 공군비행장 사실상 기능 상실... 조속 이전해야"
- 부천,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 道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운영방안 토론회

○ 중부일보

- 南 "수원軍공항 이전갈등 피하지 않겠다"
- 판교 한국파스퇴르 연구원 메르스 바이러스 무단반출
- 김포 한강철책길서 DMZ자전거투어 22일
- 한강하구 중립구역 역사탐방 뱃길추진
- 판교TV, 입주업체 임대사업장으로 변질
- 남 지사 대권출마 여부 싸고 여야 신경전
- "핵무장 선언땀 국제적 고립" vs "핵무장 논의 하자는 것"
- "경기도 단체장 관용車 전기차 0대"
- "국가차원 '경기도 분도' 논의하자"

○ 경기신문

- 도 국감은 '2기 연정' 확장판 "南 지사 협치 잘한다" 일색
- 폭력에 살인... '짐승탈' 쓴 공무원들
- 도 산하기관은 '퇴직공무원들의 천국'

- 공사-공단 해석차가 만든 '1천억 세금폭탄'
- 軍공항 이전 엇나간 과정 꼬집어
- 남경필 '연정'에 빠진 국감... 대선 행보엔 '경계'
- 도내 주택 10곳 중 9곳 '지진 무방비' 종합상황실도 36.4% 내진설계 안돼
- 경기도지사의 장관급 격상 주문
-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공간 속에 나를 발견하다
- 아동학대 신고 '껍충'... 학대전담 경찰관 태부족 '헉헉'

○ 기호일보

- 경기도 국감 = 남 지사 대선검증대
- 도 '청년수당' 무상·이중복지 아닌가
- 골목 상권 살려보자 배움 열정 상인 50명 자랑스러운 학사모
- 민간건물 내진을 13.8% 불과 경기도, 지진 종합대책 절실
- 5000만 원 '비단잉어' 보러 가 볼까
- 도내 산하기관 '관피아' 여전...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을
- 가을빛 한강철책길 따라 통일 희망 품는다
- 아동학대, 경기도서 최다 발생... 지난해 579건 '전국의 33%'

○ 인천일보

- "사드 배치·모병제·핵무장론 남 지사, 대권주자 발언 같다"
- 道 운영 '스마트폰 앱' 절반 무용지물
- 소방차량 5분 이내 도착률 37%
- 공공기관 재취업 한 퇴직공무원 수두룩
- 보름에 한 번 공무원 범죄
- 새마을회 등 3개 관변단체에 혈세 평평
- 연중 효과·막힘없는 답변 ... 경기국감 간만에 通했다
- 도내 내진시설 갖춘 주택 12.9% 뿐
- "서울시장은 장관 경기지사는 차관 ... 위상 제고를"
- 한 마리 5000만원 '비단잉어 품평회'

□ 통 신 사

○ 연합뉴스

- 경기도농기원 6~10일 코엑스서 선인장페스티벌

- 판교테크노밸리 업체들 IT 아니라 임대장사·600억 부당이득
- 경기도 산하기관 '관피아' 5년간 17곳에 59명
- 살인·성범죄...경기 공무원 5년간 4대 범죄 90건
- 29개 정원으로 새 단장 성남시청공원...경기정원박람회
- 경기도 건축물 90% 지진 무방비...학교 22%만 내진
- 경기도 저수지 44% '농업용수로도 부적합' 수질
- 경기 소방차 5분 내 현장 도착률 37%...전국 최하위
- <국감현장> 남경필 '핵무장준비·모병제·수도이전론' 집중 질의
- 경기도, 22일 김포 평화누리길서 자전거 투어
- 경기도 문화재 안전관리 '1명이 20개 담당...'허술
- 경기도 스마트폰앱 유명무실..박물관앱 이용자 24명뿐
- <국감현장> 경기도 청년수당·청년통장도 도마 위에
- 경기도, 6일 양주 5기갑여단서 '찾아가는 음악회'

○ 뉴시스

- 경기도 내 유통 냉동베리류 '농약 이상무'
- [2016 국감]"관리 손 났나" 경기도 저수지 절반 가까이 오염
- [2016국감]'인력 적고·시설 부실하고'...경기 소방, 전국에서 가장 열악
- 2016 선인장페스티벌, 서울 코엑스에서 6~10일 열려
- [2016국감]시민 외면 받는 경기도와 시·군 공공앱...예산낭비 지적
- 안성시 죽산관광단지 지정 고시...복합휴양시설 조성
- [2016국감]경기도 내 주택 87% 지진 무방비
- [2016 국감]남경필 대권 행보에 2기 연정 놓고 기대반 우려반
- [2016국감-말말말]"연정 때문에 야당 공격 무더져"

○ 뉴스1

- 남경필 오늘 국감 출석...박원순·원희룡도 '대선검증대'
- 경기도 새마을회 등 관변3단체 특혜지원 논란
- [국감브리핑]경기도, 2012~2015년 자전거사고 257% ↑
- [국감브리핑] "매맞는 노인 경기도가 가장 많아"
- [2016 국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11곳 자본잠식
- [국감브리핑]경기도내 주거시설 내진율 13%...서울의 절반
- [국감브리핑]경기도 앱 44% '무용지물'...사용자 1천명 미만
- [국감현장] 김영진 "남 지사, 수원 군공항 문제 결정의 리더십 보여줘"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도 학생 선수 696명 참가
- 성남시청 공원 일대에 29개 정원 작품 전시
- [국감현장]경기도, 전담직원 국회 안행위 의원실 파견 논란
- [국감 초점]여야 떠나 '지진 무방비' 경기도 질타
- 여야 대선 주자들은 지금 '중도 전쟁'...확장력 키우기
- [국감현장]경기도 '연정', 긍정 평가 속 한계도 지적
- [국감현장]남경필 '사드·모병제·핵무장', 안행위서 '집중타'
- [국감브리핑]경기도, 농업용저수지 '수질 관리 비상'

대선주자들, 양극화 해법 담은 '성장론' 경쟁

문재인 '국민'·안철수 '공정' 지향
김무성·유승민은 '혁신' 내세워
오세훈 '상생'·남경필 '공유'...
"용어만 그럴듯한 선언" 비판도

여야 대선주자들이 경제 이슈를 놓고 '용어 선점' 경쟁에 나섰다. 여야 주자들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저마다 '○ ○ 성장' 담론을 앞세우면서도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법까지 함께 담을 수 있는 말을 찾고 있다.

6일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행사를 갖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 성장'을 내세우고 있

다. 문 전 대표 측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국민 성장 시대를 지향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공정 성장'을 밀고 있다. 안 의원은 "성장과 분배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분배가 선순환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두 사람 모두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야말로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복지 성장론'을,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장과 복지의 상생을 추구한다"며 '상생복지 성장론'을 내세웠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혁신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양극화, 청년실업, 불공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키(key)는 경제 성장에 있다"며 "각 분야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키워진 파이를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과학기술 혁신, 시장 경제의 제도적 개혁, 경제정의, 재벌 개혁 등 혁신을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해법이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공존과 상생의 성장'을 강조한다. 오 전 시장은 "공존과 상생을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고, 이

를 통해 다음 단계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오 전 시장 측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을 할 수 있는 새 성장 동력을 찾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유적 시장 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남 지사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유와 협력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늘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와 공유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되,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용어만 그럴듯한 뿐 내용은 엇비슷하다"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국희·이욱진 기자

22.7 X 9.3 cm

원에 노하우 배우고 미니화분 만들어보세요

내일부터 성남서 '정원문화박람회'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원, 우리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정원 전문가가 조성한 작가정원 11곳, 조경·원에 동아리 등 아마추어 정원사들이 조성한 일반정원 11곳이 마련됐다. 조경 전공 대학생들이 조성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정원인 대학생정원 9곳과 도시숲 생태정원 1곳도 선보인다. 도시숲 생태정원은 성남시청 저수조 부지(1400㎡) 공간을 활용해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이 직접 나무와 꽃 등을 심어 만드는 공간이다.

다양한 정원 원예 노하우를 알려주는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등도 준비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서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정원과 함께하는 소소한 하루하루', '집에서 하는 화분 분갈이'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야외 현장에서는 플

라스틱 용기에 꽃을 심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미니화분 만들기, 꽃과 관련된 패브릭 소품 등을 만들 수 있는 별별공방 체험, 꽃차 시음, 삼목 체험, 핑거니팅 체험, 천연염색, 씨앗편지 등 13개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개막일인 7일 오후 6시 45분에는 곧 국내 개봉 예정인 영국 첼시플라워쇼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플라워쇼'가 수변무대에서 무료로 상영된다. 또 전시장 곳곳에서는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주, 플루트 앙상블, 통기타 연주, 합창단, 국악, 벨리댄스, 영화 상영 등 각종 문화 예술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조경 및 정원 관련 자재 용품 판매 부스와 경기도 우수농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된다. 전시된 정원 작품들은 박람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가 도시정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은 물론이고 시민과 숲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greenfestiva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14.6 X 13.8 cm

‘5000만원 귀하신 몸’... 안성서 비단잉어 품평회



한 마리에
5000만 원
이상을 호
가하는 ‘비
단 잉 어’를

선보이는 전국 유일의 비단잉어 품평회가 9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비단잉어양식장에서 열린다.

경기도해양수산물연구소와 (주)안성비단잉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관상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비단잉어 양식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5회째인 품평회에는 경기, 충

청, 강원 등 전국 20여곳의 비단잉어 양식어가가 참가해 우수 품종 비단잉어 70여마리를 선보인다. 올해도 5000만원을 이상 호가하는 고급 비단잉어가 출품될 예정이다. 홍백, 황금, 삼색 등 다양한 색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비단잉어도 볼 수 있다. 품평회에서는 출품 비단잉어의 체형, 색상, 무늬, 건강, 혈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비단잉어를 시상할 계획이다.

20~50년을 사는 비단잉어는 부와 장수의 상징이자 아름다운 외관으로 관상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12.3 X 8.4 cm

남경필 지사 “대선출마 내년초 결정”

안행위 | 경기도

도정보다 출마여부 질문 쏟아져
남 “지사직 버릴지 그때 결정
군대 안간 사람 장관 안쓰면 돼
꼭 핵무장 하자는 건 아냐”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도정 현안 질의보다는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남 지사는 최근 ‘모병제’, ‘핵무장 준비론’ 등을 주장해 시선을 끌었다.

첫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물었고, 남 지사는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이 “도지사직 버리고 출마할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남 지사는 “그것도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모병제는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 지사는 이에 “새 대통령이 ‘군대 안간 사람 장관 안 쓰겠다. 국회의원 공천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국가적 어젠다로 세우면 된다. 지금이야말로 정의롭지 못

하다. 뺄고 돈 없는 사람은 군대 끌려가 힘든 보직 하고, 돈 있는 사람은 면제 많이 받고 군대 가도 편한 보직 받는다”고 반박했다.

더민주 김영호 의원이 남 지사의 ‘핵무장 준비론’을 비판하자, 남 지사는 “핵 준비를 해보겠다고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제재할 수 없다. 미래를 위해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가 경기 평택·오산에 배치될 경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수도 이전 주장과 관련해 “조만간 경기도에 1700만명이 모여 살게 돼 인구집중에 따른 폐해가 발생한다. 경기지사이지만, 한국 전체가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와의 ‘연정’과 관련해 더민주 김정우 의원이 “연정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인가”라고 따지자, 남 지사는 “독일 정치에 대한 깊은 배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더민주 백재현 의원은 “연정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도 “연정은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로 기대가 크다”며 남 지사를 두둔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13.4 X 15.5 cm

‘불(不)’에 주목하는 대선 주자들

여야 떠나 “우리 사회 근본을 바꾸자”

불평등·불안·불공정 진단 비슷… 처방 색깔차

여야대선 주자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는지는 여타 주의·주장보다 중요하다. 그 진단에서 출발해 대책과 지향이 나오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제시한 키워드에는 ‘불(不)’자가 빠지지 않았다. ‘평등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등이다. 경향신문이 창간 70돌을 맞아 실시한 ‘70인 한국사회 진단’ 조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과 부정부패’를 문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불평등·불안·불통’이라고 답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평등’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불평등·불공정·불안전’으로 요약했다.

대선 주자들은 같은 맥락에서 ‘격차 해소’ ‘정의’ ‘공정’ ‘연대’ 등을 19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격차 해소’, 유 의원은 ‘정의’, 원희룡 제주지사는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

합’이라고 각각 답했다. 문 전 대표는 ‘더 평등한 경제와 공정한 세상’을 꼽았고, 박 시장은 ‘공유와 연결, 연대와 협력’이라고 답했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불평등 완화,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고, 안 전 대표는 ‘격차 해소·평화 통일·미래 준비’라고 했다.

한국 사회의 지향점에는 주자별로 철학과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강조점이 달랐다. 김 전 대표는 ‘공정한 사회’를, 유 의원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새로운 경제, 새로운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박 시장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격차 해소를 통한 중산층 복원’을 미래 비전으로 내놓았다.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때라는 것엔 주자들의 인식이 일치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고, 김 의원은 ‘리셋 코리아, 대한민국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15.0 X 12.2 cm

“모병제 우려” 남경필에도 대선 청문회

안행위 경기도 국감

핵 준비론 등 정치 쟁점에 포화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남경필 도지사에 대한 ‘대선 청문회’와 다름 없었다. 전날(4일) 서울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 행보를 견제한 것처럼 야당 의원들은 도정 현안보다는 모병제와 핵 준비론, 수도권 전 등 남 지사가 이슈화한 정치적 쟁점을 집중 공격했다.

이날 국감 첫 포문을 연 홍철호(경기 김포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부터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돌직구성이었다. 그는 “내년 초 최종 결정하겠다”며 남 지사가 피해가자 “출마 쪽으로 봐도 되느냐”고 확답을 요구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단체장 직을 유지하고 (경선에)나서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하다. 유념해 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같은 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인제) 의원은 “존재감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모병제에 대해선 국방예산 부족, 계층 간 갈등조장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남 지사는 “대통령이 군대 안 가면 안 쓰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를 만들면 불평등은 오히려 해소될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는 자주 국방 할 때가 됐다”며 “전시작 전권도 환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일부 의원들의 수도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이전 반대 논리에는 “집중되면 전셋값 올라가고 교통난, 미세먼지, 사교육 등 폐해가 발생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의 핵 준비론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핵을 보유하려 한다면,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당장 핵을 보유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미 관계 변화 등 미래를 대비해 준비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남 지사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사드 배치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논의하는 구조가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반대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유명식 기자

11.9 X 18.1 cm

여권 잠룡 남경필 검증장 된 ‘안행위 국감’

도정 현안보다 대권행보 집중 공세
남, 모병제·수도이전 입장 적극 설명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내년 초 결정”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5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도정현안에 대한 질의보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남 지사가 도정보다는 대권행보에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며 비판적 시선을 보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묻자 남 지사는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대권 경쟁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주 대화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남 지사는 자신이 대선 이슈로 제기한 모병제, 핵무장 검토, 수도 이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남 지사의 수도 이전 주장에 홍 의원이 경기도 입장에서 과연 결맞으냐고 묻자 남 지사는 “조만간 경기도에 1700만명의 인구가 모여살게 된다. 모여들면 전셋값이 올라가고 교통난, 미세먼지, 사교육비 등이 생긴다”며 “경기지사지만 이 집중의 폐해를 문제 제기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사명감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모병제 도입 주장을 놓고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이 “돈 없고 뺏 없는 젊은이만 군대에 가지 않느냐”며 ‘금수저·흙수저’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는 공직임명이나 공천 시 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력자가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국가적 어젠다로 세우면 된다”는 것이다. 핵무장 검토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를 간과한 발언이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의 비판에는 “핵무장 준비를 해보겠다는 단계에서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재할 수는 없다. 꼭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남 지사는 자신의 제안으로 도정운영에 도입한 ‘연정’에 대해 “독일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 배움 속에서 생각을 시작하며 오래전부터 해 온 고민”이라며 대권행보용 방편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경계했다. 남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논란과 관련해 “야당 부지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권력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3.5 X 18.6 cm

남경필 “軍미필 공천 배제해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혀
대선 출마 질문엔 즉답 회피
“미래 위해 핵무장 논의는 필요”



만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군에 들어오면 100% 취업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

호 의원은 “핵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의 경고와 고립이 있을 것이고 북한과 같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남 지사의 ‘핵무장 준비론’을 추궁했다. 남 지사는 “핵 준비를 해보겠다고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제재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해 테이블에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김정우 의원이 “도의회 더민주와의 연정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인가”라는 질문에 남 지사는 “오래전부터 고민했고, 독일정치에 대한 깊은 배움이 있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평택·오산에 배치되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11.1 X 14.8 cm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가 이슈화한 ‘핵무장 준비론’, ‘모병제’, ‘수도 이전’ 등이 집중 거론됐다. 남 지사의 대권행보 논란과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모병제 주장으로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인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젊은이만 군대에 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새 대통령이 ‘군대 안 간 사람 장차관 안 쓰겠다. 새누리당 공천 배제하겠다’는 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국가적 어젠다로 세우면 금수저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 백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군대 끌려가 힘든 보직하고 돈 있는 사람은 면제 많이 받고 가도 편한 보직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작지

광주 찍고 충청 찍고... '콩밭'에 마음 뺏긴 지자체장

박원순·안희정·이재명 등 잠룡들
지역행정보다 대권행보 본격화
남경필은 국감서 대선공약 문답만

야권의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국 각지를 넘나들며 대권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자체 간 업무 협의차 필요 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본업'인 지역 행정보다 대권 행보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달 30일 2박3일 일정으로 충청북도를 찾았다. 박 시장은 첫 일정으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서울시와 충북도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까지는 지자체장의 통상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일정이다.

하지만 이후 일정을 보면 지역민심을 얻기 위한 목적도 엿보인다. 그는 부인 강난희 여사의 고향인 충북 영동군 매곡면 노천상리를 찾아 장인 묘소에 성묘하고 친지·이웃과 환담했다.

자신이 '충북의 사위'라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 이어 지역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및 당직자 등을

두루 만났다.

관할 지역인 서울을 벗어난 박 시장의 광복 행보는 최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충북 방문에 앞서 지난달 29일 강원 춘천시를 찾아 이의수 작가와 토크콘서트 행사를 열기도 했다. 강원 화천군에 거주하며 강원권에 영향력이 상당한 이 작가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춘천행'의 첫 번째 초대손님으로 나선 것이다.

그는 또 지난 8월 중순 야권 심장부인 광주를 찾아 광주정신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정권만 교체해서는 안 되고 시대와 미래를 교체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며 대선 관련 견해를 거침없이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최근 부쩍 정치색을 드러내며 중앙 정부와의 마찰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그는 고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한 경찰의 물대포에 서울시 소화전의 물이 공급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경찰 물대포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화전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



남경필 지사



안희정 지사

뜻을 밝혔다. 야권 출신 서울시장 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한 사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야권 대선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다른 잠룡들도 관할 지자체를 넘어선 행보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안 지사는 지난 8월 말 광주시를 찾아 광주시교육청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행정혁신을 주제로 강연한 뒤 서구 농성동 '광주공부방'을 찾아 회원들과 간담회를 겸한 '막걸리 회식'을 했다. 광주 공부방은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

의 모임으로 이 자리에선 대권주자 안희정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갔다고 한다. 이 시장도 지난달 초 광주를 찾아 특강을 하고 광주공부방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전주시청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출연했다.

지자체장들이 지역 현안보단 대선공약 발굴에 몰두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역 행정 이슈라고 보기 힘든 모병제·핵무장·전시작전통제권 등을 쟁점화하며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도 대선주자 검증의 장으로 활용되는 양상이다. 지난 4일 진행된

서울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 전 박 시장의 대권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5일 경기도 국감에서도 남 지사가 주장해온 연정론, 모병제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들 지자체장 입장에선 의도치 않게 이번 국감이 대선주자로서 위상을 공인받는 무대가 된 셈이다.

현직 지자체장들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지자체장직이 대선주자로서의 역량을 평가받는 자리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움직임이라는 평가와 행정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대중교통 체계 개편, 청계천 복원 등 지역 내 현안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올랐다"면서 "지역 현안으로 승부를 내면서 국민에게 대권주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자신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에만 집중해도 국민이 대권주자로 호응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흥구·오수현·최희석 기자

서울경제

2016년 10월 06일 (목)
06면 정치

남경필 “핵무장 준비론은 미래 위해 논의하자는 것”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남경필
(사진) 경기도지
사는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당장 핵무장
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
해 논의를 하고 준비하자는 것”이
라며 자신이 최근 주장한 핵무장
준비론에 대해 설명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론과 핵무장
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며
“미국의 인식변화로 언제 핵우산
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는 안보 급변에 대비한 핵 보유는
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
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선언하고
들어가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
을 것이지만 핵 준비를 해보겠다
고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제재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해 테이블
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
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또 자
신의 모병제 도입론에 대해 “작지
만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국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4.4 X 16.2 cm

서울경제

2016년 10월 06일 (목)
33A면 전국

경기농기원 ‘선인장페스티벌’ 서울 코엑스서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동문 로비에
서 ‘제 13회 선인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7~8일에는 코엑스가 도시
민에게 휴식과 문화를 제공하는 ‘코엑스 어반 파크’ 행사를 같은 장
소에서 개최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선인장페스티벌은 ‘선인장
과 함께 하는 도심 속 힐링여행’을 주제로 개최된다. 우선 주제에 걸
맞게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희귀 선인장
100여 점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에케베리아 등 주요 수
출품목 150점 등이 선보인다.

/윤종열기자

9.3 X 5.3 cm

서울경제

2016년 10월 06일 (목)
33A면 전국

9일 안성서 전국 유일 ‘비단잉어 품평회’ 열려

전국 유일의 비단잉어 품평회가 9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안성 비
단잉어양식장에서 열린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안성비단
잉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관상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
은 비단잉어 양식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품평회에는 경기,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20여 개 비단잉어 양식어
가가 참가해 우수한 비단잉어 70여 마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품평회
에서는 출품 비단잉어의 체형, 색상, 무늬, 건강, 혈통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우수 비단잉어를 시상할 계획이다. 20~50년 이상 사는 비
단잉어는 부와 장수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윤종열기자

9.3 X 5.9 cm

서울경제

2016년 10월 06일 (목)
33A면 전국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냉동베리 잔류농약 모니터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지역 유통·판매업체에서 판매 중인 냉동베리 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9건에서 농약이 불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건은 냉동블루베리로, 잔류농약인 비펜트린이 0.2 mg/kg 검출됐으나 기준치(3.0 mg/kg)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베리류가 냉동으로 가공돼 1년 내내 유통되고 대부분이 수입산이어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종열기자

9.3 X 4.8 cm

한국경제

2016년 10월 06일 (목)
28면 전국

선인장페스티벌, 6~10일 코엑스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6~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2016 선인장페스티벌'을 연다. 서울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희귀 선인장 100여점과 에케베리아 등 수출품목 150여점을 선보인다. 전문 작가들이 촬영하고 그린 사진 및 회화 35점도 전시한다. 관람은 무료다.

4.8 X 6.1 cm

평택시의 '캔 장학금' 캔압축기 이용 때마다 한 개당 10원씩 적립

경기도와 평택시가 이달부터 버려지는 빈 음료수 캔을 수거해 지역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빈 캔 활용 기부문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시범 추진 뒤 성과에 따라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5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따르면 빈 음료수 캔 수거를 통한 기부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캔 압축기를 평택시 관내 읍·면·동사무소 15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대당 700만원인 캔압축기 15대 구입비 1억1000만원(도비 3300만원, 시비 7700만원)을 확보해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평택시는 안중읍, 고덕면 등 캔 압축기 설치 후보지 20곳 가운데 15곳을 확정해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캔압축기 위탁운영 단체인 환경사랑나

눔회, 평택지속발전협의회 등과 폐자원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캔압축기 대당 연간 50만원씩 총 750만원의 기부금을 모아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으로 활용한다.

박창근 환경사랑나눔회 사무총장은 "빈 캔 수거를 통한 기부금 조성으로 연간 750만원씩 5년간 총 3750만원을 저소득층 학생 30여명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 캔 활용 기부문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음료수를 마신 뒤 빈 캔을 캔압축기에 넣으면 된다. 캔압축기에 부착된 전화번호 입력 기능을 이용해 투입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빈 캔 한 개당 10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 참여자는 연말에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택지속발전협의회와 투자로 평택버스터미널 등 20곳에 캔압축기를 설치해 운영했다. 3년간 5.5t의 캔을 수거해 24명 저소득층 학생에게 총 303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동성 도 재활용팀장은 "지난 3년간 시행한 평택시의 빈 음료수 캔 회수를 통한 기부문화 사업이 좋은 성과를 냄에 따라 이를 평택시 전체로 확대한 뒤 향후 도내 전 시·군으로 보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예산지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빈 캔 회수를 통한 기부문화 사업을 평택시에서 2년여간 펼친 뒤 성과를 평가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택=윤상연 기자

syoon1111@hankyung.com

14.5 X 12.4 cm

경기도, 남한산성박물관 짓는다

유물 3600점 전시·보관 위해

경기도는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나눠 보관 중인 남한산성의 출토 유물을 한곳에 전시·보관하기 위해 남한산성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물관 건립을 전담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도 다음달 출범한다.

5일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은 성곽, 행궁 등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수십 개가 자리한 문화유산 보고로 2014년 6월 국내 11번째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30년간 20여차례 유물 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유물 3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 토지주택박물관 등 7곳에

나눠 보관하고 있다.

남한산성박물관은 국·도비 총 256억원을 들여 6000㎡ 규모로 2018년 상반기 착공, 2020년 완공 예정이다. 도에서 관리하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광주시 관할지역에 건립한다. 도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담기구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다음달 출범하기로 했다. 센터는 출범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편성 작업과 함께 부지 확정, 실시설계 등을 추진한다.

도는 출토 유물을 남한산성박물관에 모아 전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알리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수원=윤상연기자

sysoon1111@hankyung.com

9.6 X 10.8 cm



“국회가 정치 못한다고 법원이 정치하면 되나?”

▶ “국회가 정치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인이니 죄송해요. 그런데 국회가 정치 못한다고 법원까지 정치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정치 못하니 법원도 정치하겠다고 하면 사법부와 국회가 뭐가 다른니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발부를 놓고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자 이를 지적하며.

5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조건부’ 발부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는 해당 영장에 대해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며 맞섰다. 이 가운데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생겼으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이 법원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이 영장 내용을 보고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 영장으로 인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분쟁을 가속화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정치를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명쾌하게 해달라. 유리하게 해석하게 하지 마시고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는 게 사법부가 가야 할 길이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의 뜻일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 “내년 1월 대선출마를 결정할 때 지사직을 버리고 뛰어드나?” “강석호 의원님과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대권 잠룡과 새누리당의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 간에 오간 대화다.

대선출마시 현직을 유지하느냐는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묘수로 내놓은 답이었겠지만 대선행보를 본격화한 남경필 지사가 비박계 지도부에 보내는 메시지로의 의미심장하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또한 “남 지사가 경기도에서 연정을 잘하는 것을 보며 정부·여당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볼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연중유골의 화답을 보냈다. 강석호 의원은 새누리당의 또다른 잠룡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지만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김태은·배소진 기자 sojinb@
5.7 X 29.8 cm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권 도전 여부 질문 쇄도

안전행정위

여야, 연정에 긍정적

【수원=장종식 기자】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도정에 대한 큰 이슈 없이 수도권전과 모병제 등 발언을 둘러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권 주자로서의 역할과 정치적 실험인 ‘연정’ 관련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해까지 고성이가 오갔던 국감과 달리 경기도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 수준에 그쳤고 남 지사의 대권 도전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겠다”며 “내년 대권 도전을 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도지사직을 버리고 출마할 것인가”라며 남 지사를 압박했고 남 지사는 “그것도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박 서울시장의 경우 지난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대권 후보

로 출마했을 때 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말을 바꾸고 있다”며 “남 지사도 이 같은 상황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까지 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남 지사의 정치적 실험인 연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정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다.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도 “연정은 균형과 기회라는 점에서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반면 연정이 남 지사의 대권 도전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정은 협치의 모델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연정이 도지사가 대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남 지사가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르면서 공무원 22명을 국회로 보내 국정감사 질의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등 활용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경기도 행정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jang@fnnews.com
9.9 X 19.7 cm

여야 지자체 잠룡들 국감서 ‘몸값 올리기’ 주력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정감사를 활용해 ‘몸값 키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 의원들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잠룡 지자체장에게 대선 출마 관련 송곳 질의와 도정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시도지사들의 행정력을 점검하는 국감장이 사실상 여야 잠룡 자치단체장들의 대선 검증대가 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의 대선출마 시기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대선 출마 생각이)아직은 이븐(절반)”이라고 답했다.

남 지사가 공식석상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절반이라는 답변을 내놨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권도전의

**사실상 대선 검증대 올라
남경필·박원순·안희정 등
시도지사 행정력 평가**

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이날 경기도 국감은 대권 행보 논란과 더불어 남 지사가 공론화를 제기한 이슈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역점사업 등 경기도정에 관한 감사보다는 남경필이라는 인물에 초점에 맞춰진 셈이다.

실제 남 지사는 최근 모병제, 수도이전, 핵무장론 등을 화두로 꺼내며 이슈 선점에 일찌감치 나섰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행보를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10일 남 지사가 출석할 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도 관련 질의가 쏟아지면서 여야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전날 안행위 국감도 박 시장의 대권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 지사와 동일하게 박 시장에게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과 추궁이 이어졌지만 박 시장은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에게 가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여당의 비판이 있었고, 재난안전대책과 구의역 사고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야당은 중앙정부의 미비한 복지정책을 지자체가 나서서 보완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박 시장이 출석하는 국토위에선 국토위에서도 철도노조의 파업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경우 각각 오는 7일과 11일 예정된 국토위, 안행위 국감에서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은 물론 태풍 ‘차바’ 피해 수습 대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2공항 추진 계획 등의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의 또 다른 잠룡 지자체장으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도가 이번 국감에선 피감기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됐다.

국감에 출석하는 여야 잠룡 지자체장은 상대 진영의 공세에도 국감을 대선주자로서 몸값을 키우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각오다. 국감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과 행정력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이슈 선점을 위한 각종 정책 제안과 아젠다 제시에 안간힘을 쓸 것으로 관측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 X 13.3 cm

경기도 내진설계 주택 10곳 중 1곳뿐... 서울 절반도 안돼

수도권에 활성단층 존재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 내진설계 된 주택은 10곳 중 1곳으로, 서울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5일 경기도와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율은 총 13.8%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주거시설의 경우 내진율이 13.6%에 그쳐 서울 주거시설의 내진율(28.8%)의 절반에도 못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주요 건축물 내진설계는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 13.8%에 주택 등의 주거시설이 13.6%로 가장 저조했다. 이어 종교시설 15%, 시장 등의 상업시설 28%, 교육연구시설 32%, 병원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건축물 내진현황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내진설계된 주거시설은 28.8%, 종교시설 32.8%, 교육연구시설 33.3%, 병원 45.9%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와 엇비슷하거나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의 내진건물 부족문제는 최근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활성단층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더욱 불거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지질연구원이 지난 12년 정부에 제출한 활성단층 추정지도를 보면 수도권 지역의 추가령 단층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가로질러 충북지역까지 뻗어있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 단층, 동송 단층 등이 의정부로 모아지고 왕숙천 단층이 서울, 구리, 성남까지 발달되어 있어 경기 서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단층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비책은 미비한 수준으로, 종교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가 마련한 계획은 없다

는 입장이며 병원 및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예산이 계획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미지수다. 올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내진 보강사업비로 확보한 예산은 137억원으로 도내 학교 건물 3335동의 내진설계 비용으로 예상하고 있는 8907억원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 시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1 X 10.8 cm

경기도 공무원 18.8일에 한번 꼴 4대범죄 저질러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8.8일에 한번 꼴로 4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약 90

건(본청 9건·기초 자치단체 81건)의 4대 범죄를 저질렀다.

강력범죄로는 살인 1건, 성범죄 1건, 폭력 69건, 절도 19건 순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평군 8건, 고양시 8건, 수원시와 군포시가 각각 4건 순이었다.

jjang@fnnews.com
9.9 X 5.7 cm

도내 주택 87% '지진 무방비' 대책 시급

학교·공공시설 내진확보 최우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지진발생 위험성이 있는 만큼 집중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김문수 전 지사가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도입키로 했지만, 현재 미실행되고 있는 곳이 상당수"라며 도의 미흡한 내진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도내 주택의 87%가 지진에 무방비 상태며, 지진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3분의 1가량이 내진 미확보 상태"라고 지적한 뒤 "주거공간을 비롯해 학교나 공공 시설에 대한 내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

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군포갑) 의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 확보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점은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도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의 활성단층 관련 보고자료를 근거로 경기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민주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7년 전 발표된 활성단층 지도관련 보고서를 보면 왕숙천·포천 단층을 비롯해 상당수 활성단층이 경기도를 지나가는 것으로 나온다"며 "도는 이 논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당장 종합 지진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지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11.7 X 10.7 cm

지역현안 다양한 민원 '붓물'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1천300만명을 대표하는 경기도 수장의 국무회의 참여 요구부터 수도권규제 완화 등 지역현안과 연계된 도내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첫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가 촉구에 목청을 높이며 국감의 시작을 알렸다. 홍 의원은 "도는 이제 1천 300만명이라는 거대 지자체다. 그에 걸맞는 것이 국무회의 참석"이라며 "(남 지사는)지속적으로 (청와대에) 요구해서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도에 필요한 문제를 개진하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소방장비 노후화에 따른 지원을 요

"남지사, 국무회의 참석 道 문제해결 나서야"

"수도권 과다 규제로 불균형 발전 민생 피해"

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같은 당 박순자(안산단원을) 의원은 "소방장비가 전국에서 가장 노후한 국가산단인 반월·시화공단에서 해마다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후화율이 34.5%로 엄청난데, 대규모 화재 발생시 장비노후로 무방비로 당할까 우려하고 있다. 소방장비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다한 규제에 의한 민생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관련법 제정)당시 인구는 전국 인구가 3천800만명인데, 경기도는 400만명이 채 안되던 시절"이라며

"법 때문에 지방은 나름대로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수도권 내에서 대단한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해졌다"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같은 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LH가 용인 동백지구에 조성한 '쥬네브' 쇼핑몰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표 의원은 "쥬네브는 코엑스몰의 두 배 규모로 엄청나게 개발됐지만, 10년째 미분양률만 50%가 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LH의 잘못된 무리한 사업에 경기도는 희생양 수준이 아닌 '호갱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17.6 X 9.7 cm



“선서”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서를 하고 있다.

/임영수기자 pplys@kyeongin.com

김진표 “국방부, 지역갈등 부담 소극적”

수원 ‘군공항 이전’ 이슈 부상

남지사 “정부 도움없이 추진가능”

김영진 “대구 이전사업에만 특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의원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수원 군공항은 실전 같은 훈련을 하지 못해 기능을 상실했다. 이런데도 국방부는 갈등관리 차원에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력 이전지인 화성시 중 시민이 가장 안 사는 곳으로 옮겨

달라고 시민추진기구까지 설치한 만큼 예비전 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해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한민국 장관은 “이전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현재 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국방부의 할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와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는 달리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기부대양여(대토) 방식을 통한 자체 재원만으로도 사업비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부나 국가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다. 도와 수원시가 국방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지역 간 갈등이 예상돼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의사소통을 무섭다고 피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의원은 “국방부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대구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만 특혜를 주는 격인데 경기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3.5 X 19.4 cm

道 산하기관 ‘관피아’ 심각

5년간 4급이상 퇴직공무원 59명 17곳 재취업

경기도 국감에서는 퇴직 후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속칭 ‘관피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4급(서기관) 이상 퇴직공무원 59명이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17개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복지재단이 각각 8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6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명, 경기영어마을·경기콘텐츠진흥원 각 4명, 경기관광공사·경기농림진흥재단·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테크노파크에는 각 3명, 한국도자재단·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연구원·킨텍스 각 2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명 등이다. 직급으로는

본부장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표이사·단장·사장 등 기관장도 17명이나 됐다.

강 의원은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이 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재취업하게 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산하기관들의 부실과 방만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퇴직공무원의 도피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는 “퇴직한 공무원이 특정기관에 재취업하는 게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조건 재취업을 막는 것도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도 의회와 협의해 퇴직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와 가서는 안 되는 자리 등을 분명히 정해놨다”고 설명했다.

/김선희기자 ksh@kyeongin.com

11.7 X 12.3 cm

대권 잠룡 ‘정치 국감’

“출마 생각 50%... 내년초 결정”

“1년전부터 모병제준비위 구성”

연정, 與野 호평속 대선용 지적

국회안전행정위원회가 5일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는 여권내 차기대권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한 정치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남 지사는 “지금 은 대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이븐 (50%)”이라며 “고민 중이고 내년 초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이 “도지사직을 버리고 출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남 지사는 “그것도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남 지사가 제시한)모병제가 대권주자로서 제시한 것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남 지사는 “1년 전부터 모병제 준비위를 구성했다. 2023년부터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절벽에 닥친다”

라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남 지사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실시중인 연정(聯政)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지방자치 현장에서 협치의 모델로 시행하는 연정”이라는 호평 속에 대권 행보 논란과 관련한 지적도 잇따랐다.

더민주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연정이 대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남 지사는 “꽤 오래됐다. 특히 독일의 모델을 생각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연정합의문 중에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 위임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지자체와 달리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게 고정돼 있고 중앙에서 연정이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남 지사는 “지금과 같은 대립형, 승자 독식 구조에서는 협업·합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 서)지역 선거구제와 공천제도를 바꿔주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송수은·이경진기자 lki@kyeongin.com

12.2 X 16.9 cm



‘송곳 질의’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왼쪽부터)새누리당 박순자·홍철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현·박남춘·김경우·소병훈·표창원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가 polys@kyeongin.com

모병제·핵무장... 南 ‘대권행보 발언’ 겨냥

여야, 안보문제 집중 공세

“돈 없고 ‘백’없는 청년들만 지원”

“수도이전론 경기도 경쟁력 약화”

“핵무장 준비, 국제질서 큰 영향”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선 모병제와 핵무장 준비론 등 시상상 대결행보 중인 남경필 도지사의 최근 발언들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등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거론됐지만 정적 현안이 됐어야 할 경기도 정책관련 질문은 비교적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안행위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4시간 남짓 이어졌다. 남 지사는 “현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안전할까,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 주장을 “국방문제는 곧 군 전력 60%가 집중된 경기도의 문제인 만큼 도지사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모병제 등 최근 주장들이 안보문제에 집중된 만큼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황영철·장제원 의원은 “돈 없고 ‘백’ 없는 청년들만 군대를 가게 될 것”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 수가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순자(안산단원) 의원은

구체적인 방식을 물었다. 남 지사는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하고 군에 들어오면 대학 편입, 공무원 시험 등에서 이익을 받는 등 청년들이 군에 오면 100% 취업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이야 말로 돈 없고 ‘백’ 없으면 힘든 보직에 가는 청의롭지 못한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수도 이전과 핵무장 준비론,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이 일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수도권 단체장이 수도 이전을 거론하는 건 경기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핵무장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예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은 “현재 등에 사드가 배치 돼도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고 물으며 “우리 지도자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국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국민 60%가 수도권에 모여 살고 지자체 100여개가 30년 안에 없어지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리고 핵무장과 준비는 다르다. 준비단계에서 제재를 할 수는 없다”며 “사드배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안행위 국감을 받았던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대안주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날 경기도 국감에선 청년수당 정책 등 서울시와 비교하는 질문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인일보가 kanggi@kyeongin.com

35.8 X 17.9 cm

도경제정책과장 거친 행정통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



임종철(49·사진) 경기도 신임 경제실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제36회)에 합격, 경기도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과장·가정복지과장·환경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을 거쳐,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 재난총괄과장과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임 실장은 젊은 패기와 날카로운 판단력이 있고,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온화한 인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이경진기자 lki@kyeongin.com

7.0 X 9.6 cm

| 발언대 |



김 건 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농자천하지근본(農者天下之根本)

쌀은 우리민족에게 단순한 식량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오랜 역사와 삶을 함께해 온 에너지 원천이자 문화의 근간이다. 마을마다 쌀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됐고 협동과 상부상조의 지혜를 배워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많은 양의 쌀이 공출되는 바람에 백성들은 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다. 또 1970년대까지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봄이면 힘겹게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혼·분식을 장려하고 쌀막걸리를 못 담그게 하는 등 쌀소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쌀이 남아도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쌀 소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우리 국민이 밥을 덜 먹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80년 132.4kg이었던 것이 2000년 93.6kg으로 줄었고 2015년 62.9kg으로 줄

어 30여 년 새 절반 이하가 됐다. 쌀 수급동향을 보면 2015년 전국 쌀 생산량은 433만 t인데 반해 수요량은 397만 t으로 약 36만 t이 초과 공급되고 있다. 1인당 소비량 62.9kg은 하루 172g이며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이 약 100g이므로 하루 2공기를 못 먹는 것이다. 요즘 쌀값이 떨어져 20kg 한 포에 4만원이면 살 수 있지만 가장 비싼 이천쌀 6만 원을 예로 들어도 한 끼에 들어가는 쌀값은 고작 300원이다. 하루 2끼 먹을 경우 600원이면 되는 것이다. 물론 반찬값이 따로 들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3잔은 마셔야 하는 커피값에 비할까? 3천원하는 생맥주 한 잔이면 5일 치 쌀을 살 수 있다.

경기도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생산 감축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8만 2천 ha이던 벼 재배면적을 매년 약 3천 ha씩 줄여나가고 쌀 소비 판촉활동과 캠페인, 쌀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매년 쌀 생산량을 1만 5천 t씩 줄여나가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매년 약 2천 300t의 벼

우수품종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논에 벼를 심는 대신 콩, 감자 등 다른 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 논농업직불금 대신 밭작물 직불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과잉 생산 쌀은 줄이고 잡곡 생산을 늘려 현재 23%에 머물러 있는 전제 곡물 자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필자는 '농자천하지근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농자천하지근본(農者天下之根本)'으로 고쳐 부르길 좋아한다. 말 그대로 농업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식량을 생산하는 근본 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소 공기나 물의 고마움을 못 느끼듯이, 식량의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수질·공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듯이 좋은 식량 생산을 위한 노력은 멈출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다. 쌀은 수천년을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해 왔다. 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거나 탈이 나지 않는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아침밥 먹기', '하루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21.7 X 12.2 cm

도, 도대체 체납관리 어떻게 했길래...

덩치 큰 경기도의 공유재산 관리가 엉망이다. 남의 집 일보듯 소홀해 자원관리에도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체납금을 제때 건어 들이지 못한 것은 물론 해마다 손쉬운 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 대부료 연체 등에 부과된 금액은 258억 1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겨우 14.1%에 그친 36억5천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징수실적은 광역단체중 세종시의 100%, 경북의 85.7%, 충남의 82.85%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도 본청은 체납액 11억2천여만원 가운데 거둬들인 금액은 겨우 2억여원에 그쳤다. 이같은 실태는 해마다 되풀이돼 2013년엔 26억6천여만원 중 3억7천여만원, 2014년엔 11억1천여만원 부과에 거둬들인 것은 겨우 1억6천여만원 뿐이다. 도는 이같은 공유재산의 부실한 체납관리에도 개선점을 찾는 노력은 커녕 해마다 미징수 금액을 결손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체납관리 부실로 인한 결손처리 금액은 33억여원으로 한해

평균 11억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타 광역단체의 엄격한 체납관리 실태와는 달리 경기도의 체납관리 시스템은 느슨한 때문이다.

이같은 실태는 체납자들의 납세 관행을 흐트러뜨려 면책기회를 주는 관행을 낳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부과되는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해 압류 등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 적당히 5년만 넘기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이같은 법 취지를 악용할 경우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현장으로 뛰지 않고 앉아서 받는 세금만 챙기겠다는 안이한 행태다.

체납관리는 납세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세제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는 공익성 재산관리가 이처럼 방치돼선 안된다고 필요시 법령과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의 부실한 체납관리는 짜임새 있는 살림을 위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12.6 X 13.6 cm



5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결국 '남경필 국감'

대선행보 질의 쏟아져 도정 관련 내용은 빈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여권 잠룡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선 행보' 국감으로 전락했다.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행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지사가 이슈화한 '핵무장 준비론', '모병제', '수도 이전' 등 대권 행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경기도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는 빈약했다.

남 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내년 초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질문자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찾아뵙고 깊이 상의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모병제 주장으로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돈 없고 뺨없는 젊은이만 군대에 가지 않느냐, 사회계층 갈등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지금이야말로 정의롭지 못하다. 뺨없고 돈 없는 사람은 군대 끌려가 힘든 보직하고 돈 있는 사람은 면제 받고 가도 편한 보직 받는다"고 반박했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국가적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국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은 "핵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 경고와 고립이 있을 것이고 북한과 같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며 남 지사의 '핵무

장 준비론'을 추궁했다.

이에 남 지사는 "핵 준비를 해보겠다고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국제사회) 제재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해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제2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평택·오산에 배치될 경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수도 이전' 주장이 수도권인 경기도 입장에서 맞느냐고 묻자 남 지사는 "조만간 경기도에 1천700만명이 모여 살고 수도권이 전국 인구의 60%를 차지한다. 모여들면 전셋값 올라가고 교통난, 미세먼지, 사교육 등 집중의 폐해가 발생한다"며 "경기지사지만 한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부산사상)은 "지목(G-MOOK)은 제이목, 케이목, 벤치마킹한거냐. 제이목, 케이목을 맡은신분들은 다들 전문가인데 윤여준 장관은 정치전문가이지 관련 전문가는 아니다"며 "남경필 정치대선패드에 모신거 아니냐는 여론이있다"고 질타하는 등 도정 관련 질의보다는 남 지사의 대선 행보와 관련된 질의가 주를 이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안행위 의원들은 남 지사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聯政)에 대해서는 호평을 쏟아냈다.

최원재·이호준기자
관련기사 234면

“생활 속 꽃 소비로 김영란법 이기자”

화환 꺼리며 화훼농가 직격탄
꽃 축제·유통센터 현대화 등
민·관·정 다양한 지원책 모색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농가가 된서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경기도농업기술원의 7개 과에는 형형색색의 꽃다발이 배달됐다. 총 23점의 꽃다발은 직원들 회의용 테이블마다 하나씩 놓여 사무실을 환하게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화훼농가가 어려움에 부딪치자 꽃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농가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원테이블 원플라워(One table One flower)’ 캠페인에 동참한 것이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가 지난해 꽃 생활화를 위해 시범 시행한 사업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지난 8월부터 6개 화훼단체가 참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영순 도농기원 원예육종팀장은 “김영란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실천해보자는 취지에 공감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꽃이 놓였을 뿐인데 직원들 간 화낼 일도 적어지고 사무실 분위기도 부드러워져 다들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환이나 꽃 선물을 꺼리게 되면서 화훼산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 돕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지자체는 농가 지원 방안, 정부와 민간에서는 생활 속에서 꽃 소비 캠페인을 펼치며 김영란법으로 얼어붙은 화훼산업을 되살리자는 목표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꽃 소비 캠페인이 화훼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면 국민과 기업,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 속에서 꽃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예술의전당에서 ‘꽃 생활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꽃 등 화훼는 기존에 선물 수요가 70~80%에 달했는데, 행사를 통해 ‘원 테이블 원 플라워’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가족과 자신을 위한 생활 속 꽃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화훼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에서는 농가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하남시는 화훼농가 공동분담을 위해 79개 농가에 대해 화분 지원(1억1천만 원), 인공상토 지원(1억3천만 원)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고양시는 난을 5만 원 이하로 낮춰 판매할 수 있도록 ‘가격 맞춤형 상품’ 품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관공서나 가정 등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

는 꽃을 구매하도록 소비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꽃 박람회에서 지역 농가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과천시도 이전부터 추진해 온 화훼유통센터 현대화 작업을 이어가는 등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나친 소비경색은 농가를 위기를 몰아넣는 만큼 국민이 건전한 소비문화에 앞장서고, 정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꽃과 음료를 파는 카페로 이름난 갯잇 플라워 장은옥 대표는 “소비자들이 꽃이나 화환 등을 뇌물이나 선물로 접근하거나 소비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농산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건전한 꽃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마련하고,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꾸는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여승규기자
22.8 X 13.0 cm

저수지 10곳중 4.5곳 ‘수질 비상’

5·6등급… 농업용수도 사용 불가

경기도내 저수지 절반가량은 수질이 좋지 않아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실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경기도내 저수지 수질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전국 저수지 수질조사 결과 경기도내 56개 저수지 중 44.6%인 25개 저수지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최하위인 5·6등급 수질관정을 받았다.

특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5등급(나쁨) 저수지는 10곳, 용존산소가 거

의 없어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6등급(매우 나쁨) 저수지는 15곳에 달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농업용수관리 권고기준을 4등급으로 정하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결국 도내 절반가량의 저수지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또 최근 3년간 저수지 수질 역시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 수질 저수지는 지난 2013년 55개 중 11개(20%), 2014년 55개 중 17개(30.9%), 2015년 56개 중 25개(44.6%)로 매년 증가해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수질 악화 저수지가 3년 새 두 배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6곳, 안성시가 4곳, 용인시가 3곳으로 많았고 이천과 양주시 2곳, 양평·연천·파주·군포·의왕·시흥·평택이 각각 1곳이었다. 이호준기자
11.2 X 11.7 cm

道 공공기관 ‘통·폐합’ 용두사미

대상기관!... 출자·출연기관 증원

경기도가 공공기관 통·폐합은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총 정원은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했던 경기도내 공공기관 통·폐합이 당시 계획보다 소수기관만 시행되는 등 통폐합 노력이 부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총 정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오히려 늘려놓는 등 공공기관 효율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지만 최초 용역안(공공기관 수 25개 → 13개)과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와 안(공공기관 24개 → 17개)에 크게 못 미치는 5개 기업에 대한 통폐합만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기관의 인력관리를 위해 ‘출자출연기관의 총 정원수를 경기도 공무원의 110% 범위’로 개정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소방직제외)이 4천여 명이고 출자출연기관이 3천600여 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440여 명 이상이 더 증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셈이다.

강 의원은 “경기도는 추가 논의를 통해 통폐합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다시 논의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치 논리에 밀려 실질적인 통폐합이 어렵게 되고 추가적인 통폐합도 어려운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11.4 X 11.7 cm

‘냉동베리’ 대부분 잔류농약 안전

경기지역에서 유통되는 블루베리와 복분자 등 냉동베리가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지역 유통·판매업체에서 판매 중인 냉동베리 4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9건에서 농약이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건은 냉동블루베리로, 잔류농약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0.2 mg/kg 검출됐으나 기준치(3.0 mg/g) 이내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베리류가 냉동으로 가공돼 일 년 내내 유통되고 대부분이 외국산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박준상기자
5.6 X 10.2 cm

“연정 통해 도민이 행복한 道 만들 것”

강득구 연정부지사 출석... 격려 당부

○-지난 4일 취임한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이날 국감장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감사위원들에게 공식 소개돼 눈길.

이날 강 연정부지사는 “2기 경기 연정은 288개 민생사업이 담긴 연정 합의문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도의회 여야와 집행부가 상호 합의한 것”이라고 소개한 뒤 “연정 합의문을 바탕으로 진정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 밝히. 그는 이어 “경기 연정의 좋은 사례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뻗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

한편 이날 국감에서 대다수 안행위 의원들은 경기 연정에 대한 소개 및 과제, 성과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로 일관.

박준상·김광호기자

7.3 X 10.0 cm

“하필이면 오수관리팀장이야 재수없게...”

장정숙 의원, 특정 부서 비하 발언 눈총

○5일 실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국민의당·비례)이 특정 부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 눈총.

장 의원은 이날 경기도 공무원들이 국감 전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질의서를 받아오는 관행에 대해 “도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해야 할 시간에 경기도 공무원이 질의서를 얻으러 국회에 와 있어도 되는가”라며 강하게 질타.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만 보면 권은희 의원은 원예특작팀장이, 저한테는 에너지정책팀장이, 이용호 의원에게는 오수관리팀장이 찾아 왔다”고 설명하던 도중 “이용호 의원님이 옆(자리)에서 그러시네요. 하필이면 ‘오수’냐고 재수없게...”라고 발언해 눈살.

장 의원은 또 “성의가 있다면 재난안전과 등 안행위 관련 부서에서 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너무 도지사님 눈치만 보고 ‘오징어 행세’하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관련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랏일을 살피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쓴웃음.

한편 장 의원은 연이어 진행된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경기도 국감 질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정제 되지 않은 거

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들께 사과드리고 쓰지도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받은 이용호 의원께도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사과.

접경지역 지원·쥬네브 사태... 의원들 '지역현안 챙기기' 사활

경기도 국감현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16년 경기도 국정감사가 남경필 경기지사와 대권 쟁보에 집중된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들은 경기도 국감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무대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김포는 지역적으로 북부인대 행정상 서부로 돼 있다. 이에 접경지역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양주시는 300억 원이 넘게 지원되고 김포시는 60억 원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포는 신도시사업 때문에 경제 지표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 역시 용인 동백지구에서 LH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인 '쥬네브' 사태를 꼬집으며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 의원은 "LH공사가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줄여 나가는 데 있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용인 쥬네브가 대표적 사례"라며 "어긋은 10년째 미분양율이 50%가 넘는다. 분양받은 시민 중에는 자살한 사람들도 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우 "재난대책본부 내전설계 사업" 백재현 "재해예방 공사·신안산선 지원" 소병훈 "남한산성 박물관 신속 추진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포갑 지역의 김경우 의원(더민주)은 자연재해 사고가 잦은 지역에 대한 사고 방지 대책과 도내 재난대책본부 33개소의 내전설계율이 64%(12개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역시 "태풍 치바 때문에 울산 태화강이 넘쳐 큰일인데 광명도 늘 목감현이 걱정이다. 목감현 재해예방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면서 "신안산선 관련 민간사업자 공모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하는 등 지역 현안 사안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소병훈 의원(더민주·광주)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위한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선언을 개소했는데 직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파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는 문화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감 열기 후론 5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남춘(더민주·인천 남동갑), 김경진(더민주·수원남), 표창원(더민주·용인정), 홍철호(새누리·김포)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34.6 X 15.4 cm

박순자 "도 미세먼지 너무 높아 걱정" 남다른 애정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이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섬세함과 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선보였다.

박 의원은 이날 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출퇴근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우려했다. 남경필 지사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설명하자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의 청년수당(청년구직지원금) 계획을 평가절하한 것에 대해 남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야권 잠룡인 박 시장이 새누리당 잠룡인 남 지사에 대해 청년수당을 놓고 도발을 했지만 아무도 이를 거론하

지 않아 마치 박 시장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남 지사는 도의 청년수당은 여야간 합의,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 일방통행식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재민기자

11.3 X 7.7 cm

“수원 공군비행장 사실상 기능 상실… 조속 이전해야”

김진표 “소음피해 법안 통과되면 年2조 보상해야”
김영진 “대구비행장만 특혜”… 道차원 대책 촉구

수원 공군 비행장의 조속한 이전 절차 이행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
서 연이어 터져 나왔다.

5일 국방부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
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도둑 규정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 법
안이 통과되면 수원 비행장은 매년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소음 피해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군 비행장 중 가장 복단에 있는 수원
비행장은 전시에 수도권을 보호하고 북
한의 미사일이나 전력을 파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전이와 같은 제
제를 갖춘 채 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에서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 군비행장 이전 특별
법안이 마련돼 있지만 국방부가 법안에
따라 수원비행장을 이전하겠다는 의지
가 보이지 않는다”며 “수원비행장이 도
심 한가운데 위치해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이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원비행장의
이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다른 이유로 지연하는 의도는 전혀 없
다.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할 일을 해나
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안행
위의 국감에서도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
가 화두가 됐다.

대민주 김영진 의원(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를 상대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추진과 비교, 수원비행장 이전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

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 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
서 수원에는 2014년에 건이서기 제출됐고
수정 건이됐다. 이전승인이 작년 5월4일
에 상의됐으며 경기도 올해 8월 상의됐
음에도 정제돼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
비행장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희석시
키려고 한 달 만에 이전승인이 났다. 대
구비행장만 특혜를 받으며 추진되는 것
에 대해 국면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나 정부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구비행장과는 여건이 다르다”
면서도 “수원은 예정대로 이전해야 한다.
대통령과의 오전에서도 논의하면 안 된
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남 지사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지만 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방부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부담이 있지만 국방부
장관에게도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겠
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34.7 X 8.6 cm

부천,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부천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
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하는 ‘2016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가 7~9일 시청 잔디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62개 전통시장
과 44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부천에
서는 9개 전통시장과 15개 점포가 참여
해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전시·판매한다.

시장별로 특화된 100여 개의 우수상
품 전시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의 특
색 있는 음식을 함께 선보이는 먹거리
장터가 마련된다.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에어바운
스, 미니기차, 미니 동물농장 등으로 꾸
민 ‘키즈랜드’도 운영한다.

송대관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영
화상영, 댄스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박람회 기간 내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부천

5.5 X 10.7 cm

도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운영방안 토론회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김중목·경기
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는 5일 100여 명
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건강가정지원
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운영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조금량 의정부시건
강가정지원센터장이 ‘경기도 시·군 건강
가정지원센터의 수요자 중심 가족서비
스 지원을 위한 광역센터의 역할’을, 이
나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선 서원대 교수(사회복지학과)가 각

각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가족지원서비
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패널들은 입을 모아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정체성(identity)을 적극 홍보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며 31개 시·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
역센터 간 상호연계 강화 중요성을 강조했
다. 더불어 서비스 개발부터 수립·시행을
맡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개선
도 이번 조사를 통해 적극 정책에 반영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소영·손의연기자

11.3 X 12.1 cm



수원 팔달6선 '군공항 이전' 팀워크 5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영진의원(남경필도지사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南 “수원軍공항 이전갈등 피하지 않겠다”

남지사, 국감서 이전의지 피력
김영진의원, 도지사 역할 당부
김진표 “국방부 소극적” 지적
국방장관 “이전 필요성 인지”



이뤄져야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의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의

질문에 “경기도가 이전 대상 지방정부와 논의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 지사에게 “2014년에 수원시의 건의를 시작으로 수정 보완을 거쳐 조정심의 과정이 이어졌고, 이전 건의 승인까지 받았다”면서 “하지만 수원군공항에 비해 이전 논의가 더 늦었던 광주나 대구군공항 이전 진행이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당부했다.

남 지사는 “수원 군공항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난번 청와대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오찬에서도 대통령에게 행여 늦춰지면 안 된다고 건의했고, 대통령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과 광주, 대구는 각각의 여건이 다르다”며 “수원은 국방부와 국가 도움 없이도 군공항 이전을 할 수 있지만 광주와 대구 군공항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똑같이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와 경기도가 협력, 국방부와 협의한다면 국가 도움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부대양여(대토) 방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수원 시에게 국방부와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관련 지방정부 여론을 수렴해서 도지사가 결정의 리더십 통해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남 지사는 “갈등 관련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겠다”면서 “자칫 국방부에 의사소통을 피하는 것처럼 비춰졌다. 경기도가 해당 지방정부와 토의해서 대책을 마련,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국방부장관에게도 전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최북단에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은 공군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꼭 실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비행장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야간훈련이나 기동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된다”며 “수원 군공항 탄약저장시설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전국 16개 군공항 중 19.4%, 비행장 안의 미군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은 41%에 달한다.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인데 비행장 이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3면에 계속·관련기사 3면
김재득·김현우·오정인기자

17.0 X 30.2 cm

판교 한국파스퇴르 연구원 메르스 바이러스 무단반출

<치료제 연구·개발용>

연구소 국외반출 인지 은폐 의혹 佛에 신고안해 국제분쟁 우려

성남 판교에 있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속 한 연구원이 지난해 중동기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메르스 바이러스를 국외로 반출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유엔이 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위험물 등급 class 6.2에 해당되는 전염성 물질이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측은 소속 연구원의 무허가 바이러스 반출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은폐 의혹마저 일고 있다.

중부일보 취재 결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속 A연구원이 지난해 하반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보관중이던 메르스 바이러스를 무단 반출했다. 이 연구원이 반출한 바이러스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측이 메르스 치료제를 연구 개발할 목적으

로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저분자 메르스 치료물질 개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연구원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국외로 무단 반출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한국파스퇴르연구소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메르스가 한국에서 변이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 연구원이 프랑스 파스퇴르의 초청으로 메르스 변이 등에 관한 연구발표를 위해 바이러스를 가지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물론이고 항공사에도 바이러스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상 위험물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화주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항공사는 최대 6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전염성 물질로 위험물에 해당되지만, 시료의 양(量)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정해진다”면서 “신고 대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프랑스에도 메르스 바이러스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자칫 국제 분쟁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관계자는 “바이러스 샘플을 운반하는 튜브가 파열될 경우 기내에서 2·3차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프랑스 당국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프랑스로 반출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측은 사멸된 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생균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부일보는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측을 통해 연구원 A씨에게 수차례 반론 요구를 했지만, 회신하지 않았다.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지난해 메르스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김만구·이복진·김현우기자

17.0 X 17.1 cm

김포 한강철책길서 DMZ자전거투어 22일

파주시에서만 개최되던 DMZ 자전거투어가 오는 22일 김포시 한강 철책길에서도 열린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2016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인(in) 김포' 행사를 연다.

행사는 전류리 포구 인근 군부대 연병장에서 출발해 하류 방향으로 한강

을 따라 석탄배수펌프장~후평리 철새도래지~한강 철책길을 지나 전류리 포구로 돌아오는 왕복 18km 구간에서 열린다. 코스는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편안하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13일까지 300명을 선착순 모집해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윤성기자

11.3 X 5.4 cm

한강하구 중립구역 역사탐방 뱃길추진

파주 임진강~강화군 67km구간
道, 서울·인천시에 사업 제안

6·25 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 배가 다니지 않던 한강하구 중립구역에 역사·생태탐방 뱃길조성이 추진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시 임진강 합류지점부터 강화군까지 67km 구간의 한강하구 중립구역에 역사·생태탐방 뱃길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서울시, 인천시에 한강하구 중립구역을 개방해 습지 생태계와 조선시대 포구를 활용한 관광뱃길로 운영하는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부터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까지 67km 길이의 강은 중립구역으로 정해졌다.

협정상 군용 선박은 통행을 하지 못하지만 무장을 하지 않은 남북한 민간 선박의 경우 유엔 군정위에 등록 후 통

행할 수 있다.

경기도는 조선시대 한강하구를 이용해 물자를 운송하던 포구가 많았던 것에 착안해 역사 탐방길을 만드는 것을 구상중이다. 당시 이북에서 소금 등의 물자가 한강하구를 통해 마포를 거쳐 한양으로 운송됐다.

배와 사람이 다니지 않아 보전된 습지생태계(철새도래지 등)를 활용한 생태 탐방길 조성도 검토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강하구는 60여년간 배가 다니지 않아 습지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고, 조선시대 포구 집결지로 남북 물류 운송의 중심지라는 상징성이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뱃길이 열리면 화해의 상징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연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 선박의 통행등록과 중앙부처의 허가 등의 과제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과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서희수기자

11.3 X 16.1 cm

판교TV, 입주업체 임대사업장으로 변질

25곳 중 15곳 임대비율 위반
연간 593억5천만원 부당이득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IT기업에게 연구용지를 싼값에 제공했던 판교 테크노밸리(판교TV)가 입주업체들의 임대사업장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남동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판교TV 입주업체 25개 중 15개가 사업계획서상 임대비율을 위반해 초과 임대한 건물면적은 46만6천374㎡ (14만1천325평)에 달했다. 도는 33㎡ 당 월 임대료를 3만5천 원으로 가정, 부당 임대수익을 월 49억4천637만 원, 연간 593억5천650만 원이라고 산출했다.

현재 주변시세가 평당 5만 원 이상이라고 보고 산출할 경우 월수익은 약 70억 원, 연간 848억 원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 임대가능비율을 0%로 제시했지만, 올해 4월말 현재 건물의 78.57%를 임대 중이다. 넥슨컨소시엄도 임대가능비율이 0%임에도 건물의 50.88%를 임대하고 있다.

이같이 임대가능비율이 0%로 제시하고 초과임대를 하는 업체는 10개 업체에 달한다.

그동안 경기도가 IT업체들의 초과임대와 관련해 임대비율이 자율적이고 불허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방치한 결과, 문제제기 3년 만인 2016년 1월 첫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느슨한 관리감독이 IT기업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100% 자가사용을 약속하고 연구용지에 할인 분양을 받아 들어온 IT기업들이 임대비율을 어기고 수백억대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기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태”라며 “이를 관리감독할 경기도의 대응이 매우 아쉽고,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편집=김종겸기자

17.3 X 15.6 cm

남 지사 대권출마 여부 싸고 여야 신경전

與, 이슈선점 등 대권행보 호평
野 ‘직함 내려 놓고 출마하라’
南 “출마, 내년 초 결정하겠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남경필 지사의 대권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여야 의원들은 남 지사의 대권도전 출마 시기와 지사직 유지 여부, 대권행보 논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1천 300만 경기도민을 책임지고 있는데, 대선에 출마하겠느냐”고 묻자 남 지사는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의원이 “부등호가 출마 쪽인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아직은 이분이

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지사직을 버리고 대선에 뛰어들지, 아니면 김문수 전 지사처럼 (지사직을) 갖고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그때(내년 초) 가서 상의하고 결정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12년 김문수 전 지사가 대선후보로 나설 당시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직을 가지고 대권을 뛰면 안된다고도 말했다”며 “자기 말도 못 지키는 게 아닌지 남 지사도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재원 의원은 “남 지사의 대권행보가 모병제, 전작권환수, 수도이전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이슈 선점을 하고 있다”며 “그게 더 좋은 대권행보”라고 호평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남 지사의 대권행보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연정이 대권으로 가기 위한 방편인가”고 묻자, 남 지사는 “오래전부터 고민했다. 독일정치에 대한 깊은 배움이 있었다. 꽤 오래됐다”고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사드, 모병제, 핵무장, 전작권 등 도지사보단 대선주자 발언으로, 대선주자의 행보도 함께 있는 것이냐”고 질문한데 대해 남 지사는 “국방문제는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우회적으로 응답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도 행정업무에 종사해야 할 공무원을 의원실에 보내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남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며 “경기도 공무원은 도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도지사 대권행보 꽃길과는 상관 없다. 대권에 도전할거라면 도지사직을 내려 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득·나은섭기자

17.3 X 11.6 cm

“핵무장 선언엔 국제적 고립” vs “핵무장 논의 하자는 것”

연정·핵무장·수도이전·모병제 공방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잠재적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상대로 도정 등 현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서 의원들은 남 지사의 핵심적인 ‘2기 연정’과 ‘핵무장 준비론’, ‘모병제’, ‘수도이전’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제2기 연정(聯政) 호평 = 더불어민주당의 2기 연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김포당”이라는 말이 있다. 사·도·의원, 국회의원이 여야없이 1박2일 다닐 정도로 협업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 광역 캐시스로 연정을 실시하고 긍정적인 평가 받고 있다”고 호평했다.

남 지사는 연정 의미에 대해 “당파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경기도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인 투자와 복지를 탄탄히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 한 명 한 명의 행복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연정의 가치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환경청 의원은 “연정의 정치적 실현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험적 성공은 가능하지만 국가적 정책으로 발전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남 지사는 “선거법과 지역구 선거구 제도문제를 고치면 협업에 도움이 되고 공천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는 논의의 구조 자체가 완전대립형으로 승자독식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협업, 협치를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적·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다면 국에서도 협치가 분명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순자(안산단원) 의원의 연정 1기 개선·보완 부분에 대해 남 지사는 “보좌관제와 지방장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법의 미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불가능했다”면서 “제도적으로 불가능해 다른 이름으로 진행 중이다. 경기도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더민주 김경우(군포갑) 의원은 “연정 부지사는 행정 1, 2부지사, 다른 사·도 부지사와 역할이 달라야 연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왼쪽 사진)5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의원이 남경필 도지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노란규기자

제2기 연정

국가적 정책 발전 어려울 듯
“선거법·공천구조 개선해야”

남 지사는 “동의를 한다”며 “인사, 예산 등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무장준비론 =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핵무장준비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핵무장 발안에 대해 한번도 전체가 자멸할 거라는 어불성설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자는 것으로,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핵무장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의 인식도 이번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민주 김영호 의원은 “핵무장을 선언하면 국제질서에 대한 큰 고립과 경고가 있을 것이고, 북한과 같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을 선언하고 들어갈게 되면 NPT, 국제사회 등의 제재가 분명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핵무장 ‘준비’를 해보겠다는 의미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할

핵무장

자칫 북한과 같은 제재 우려
“논의 자체를 제재할 순 없어”

그는 “핵무장과 핵무장 준비, 이 두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하고, 태어날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는 것은 필요하다”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태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수도이전론 = 실현 가능성 때문인지 기대 이하의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은 “수도 이전” 주장이 수도권 경기도 입장에서 맞느냐”면서 “수도이전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민은 조만간 1천 700만명에 달할 것이고, 수도권 인구만 3천만명으로 전국 인구의 60%에 달한다”며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는 것은 감시할 일이지만 수도권, 경기도에서 할 일이 점점 많아진다. 전세난, 교통난, 미세먼지, 사교육비 문제 등 인구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지사직인 이에는 문제제기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이전

수도이전 주장 道 입장 맞나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사명감”

▶모병제 =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남 지사가 지난 국회서 모병제를 주장하면서 예산과 금수저 논란이 제기됐다”며 “현실적으로 모병제가 도입됐을 때 소요되는 국가적 예산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 의원은 이어 “민약 모병제를 실시

모병제

백 없는 젊은이들만 가게 돼
“군비필자 장·차관 배제 필요”

할 때 결국 돈 없고 백 없는 젊은이들만 군대 가지 않겠냐는 지적으로 어느 부모가 돈 벌기 위해 군대 보내겠느냐”면서 “모병제가 본질을 떠나서 금수저, 흙수저 등 사회계층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지사는 “착지한 강한 군대가 필요

하고, 자주국방이 될 때가 됐다”며 “모병제, 핵무장, 전작권 환수 등은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 국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대통령이 ‘장차관들을 군대 안 간 사람으로 채우지 않겠다. 배제하겠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세운다면 군대를 누구나 가고자 할 것”이라며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금수저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재득기자

34.9 X 29.6 cm

“경기도 단체장 관용車 전기차 0대”

안행위 김정우 더민주 의원

경기도청 및 관내 지자체에 보급된 202대의 공공 및 민간 전기차 중 단체장 관용차 사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가 국회 안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5만832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자 하지만 현재까지 관내에 보급된 전



속 공무원 1천216명당 1대에 불과한 수치다. 그나마 2011년 도입된 3대의 운행거리는 각각 1만km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제로 이용이 저조했다.

기차 대수는 공공 132대, 민간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청이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전기차는 3대

이며, 이는 도청 소속 공무원 1천216명당 1대에 불과한 수치다. 그나마 2011년 도입된 3대의 운행거리는 각각 1만km에도 못 미치고 있어 실제로 이용이 저조했다.

반면 고양시는 공용으로 4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수원시 15대, 부천시 10대 등으로 기초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다. 민간에 지원된 전기차는 안산시가 33대, 수원시가 23대 고양시가 11대, 부천시가 7대로 지자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전기차의 보급 대수에 큰 편차를 보였다. 민간에 지원된 전기차 중에는 BMW가 13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도지사와 자치단체장 모두 전기차를 외면하는데는 전기차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남경필 도지사가 술선수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17.0 X 7.6 cm

“국가차원 ‘경기도 분도’ 논의하자”

안행위 백재현 더민주 의원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역량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지역을 나누는 ‘경기도 분도론’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의원은 5일 경기도 국감 보도자료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성이 경기남부 지역과 다르기에 경기남부 지역과는 다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지사 개인의 결정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경기도 분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남부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지방재정자립의 경우에도 매우 열악한 상태다.

경기남부 지역의 수원시(51.4%), 성남시(56.8%)의 재정자립도는 50%가 넘지만 경기북부의 동두천시(14.7%), 가평군(19%)의 재정자립도는 20%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지역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정책상 목적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산업시설, 사회간접시설 등 지역개발 투자는 거의 없는 대신 도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 도전체 개발제한구역의 43%, 수도권 규제(수정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

이러한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지역은 통일을 대비한 지역으로서 전초기지, 통일 한반도 중심지로서 거점기능을 담당할 전략적 요충지이다.

백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공식적인 논의의 장으로 올라와야 한다”면서 “최우선적으로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차원에서 경기북도 신설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6.8 X 9.7 cm



남경필 지사 선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5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증언 선서를 하고 있다. /노경신기자 mono316@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장 선서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poet11@

도 국감은 '2기 연정' 확장판 (안전행정위원회) “南 지사 협치 잘한다” 일색

“광역지자체 모델” 긍정적 평가
여·야 의원 “성공해라” 힘 실어줘

수도이전·모병제·핵무장론 등
이슈발언 재상기 문제점 지적에
‘대권행보’ 실린 설득성 소신 강조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남경필 지사가 추진중인 경기 연정의 확산판이었다.

▶▶국감 관련기사 2·3·4·18·19면
여야 의원 대부분이 전날 출범한 2기 경기연정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잇따랐다.

우선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울) 의원은 연정을 “전국 광역지자체의 모델 케이스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석했고, 같은당 강석호(경북 영암·영미·봉화·울진) 의원은 “연정을 통해 다름이 줄었다. 협조가 잘 되나”란 짧은 질문을 통해 연정의 긍정적 부분을 극대화시켰다.

박순자(새누리·안산단원울) 의원은 “남 지사가 실질적 협치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 뜻 거듭했다.

대불어민주당 김경호(군포갑) 의원은 “아당이 추진한 연정부지사는 행정 1·2 부지사나 다른 사·도 부지사와 달리 정책 파트너로 봐야 한다”며 연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백재현(더민주·광명

갑) 의원 역시 “1기를 잘 마무리하고, 2기를 새롭게 시작한 경기연정이 성공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은 연정뿐 아니라 수도이전·모병제·핵무장론 등 남 지사가 최근 쏟아낸 발언을 재상기 시키며 남 지사의 대권 행보에 힘을 실었다.

홍철호 의원은 수도이전 문제를 꺼내 들어 남 지사가 “전세난, 교통난, 사교육 문제, 수도권 집중이 아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선 수도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할 수 있도록 거듭했다.

또 황영철(새누리,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남 지사의 모병제를 두고 “급수제·출수제 논란 등 사회적 충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거론하자 남 지사는 “새 대통령이 ‘군대 안간 사람은 장·차관으로 안 쓰겠다.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국가적 어젠다로 세우면 된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모병제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아당 측 의원들은 도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을 거쳤으나 남 지사의 견고한 방패를 뚫지는 못했다.

김영진(더민주·수원병) 의원은 “정부의 군공화 이전 TF는 수원이 아닌 대구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남 지사는 “수원은 국가 도움 없이 도와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토의해 할 수 있다”며 일축했다.

또 김영호(더민주·서울 서대문울) 의원은 “평택이나 오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할 찬성했다. 제2의 사드가 이곳에 와도 환영할 것인가. 또 핵보유 시 국제사회의 경고와 고압우려도 있다”라며 따져 물었다.

그런지 남 지사는 “사드는 환영까지는 아니나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동의한다”며 “핵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의무주겠다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미래에 도래할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려를 잠재웠다.

/안경환·이슬하·조용천기자 jing@

36.3 X 30.3 cm

폭력에 살인... '짐승탈' 쓴 공무원들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4대 범죄 90건

성남 1위... 양평·고양 순

파면 등 중징계 불과 '4건'

경기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총 90건의 4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범죄는 살인, 성범죄, 폭력, 절도 등으로 18.8일에 한번 꼴로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광주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와 31개 시·군 공무원이 총 90건의 4대 범죄를 저질렀다.

유형별로는 살인 1건, 성범죄 1건, 폭력 69건, 절도 19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7건, 2013년 25건, 2014년 16건, 지난해 21건, 올해 8월까지 11건 등이다.

4대 범죄는 도 공무원이 9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81건을 각각 저질렀다. 시·군 가운데는 성남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평군 8건, 고양시 8건, 수원시·군포시 각 4건 등의 순이었다.

4대 범죄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시·군은 한 곳도 없었다.

이들의 조치 내역을 보면 전체 84건이 경징계를 받았고, 파면 등 중징계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건은 훈계에 그쳤다.

소 의원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공직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반드시 기강해일로 이어진다”며 “공무원은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경환기자 jing@

11.1 X 12.4 cm

도 산하기관은 ‘퇴직공무원들의 천국’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

최근 5년간 59명 ‘낙하산’
도 도시공·복지재단 ‘집중’
본부장 31명·기관장 17명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경기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기관이나 도피처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복지재단에 재취업 사례가 집중됐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경기영양 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9명의 경기도 퇴직 공무원(4급 이상)이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1명 ▲2013년 15명 ▲2014년 15명 ▲2015년 9명 ▲2016년(1~7월) 9명이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복지재단에 각각 8명이 몰려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6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명 ▲경기영아마을·경기콘텐츠진흥원 4명 ▲경기관광공사·경기농림재단·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테크노파크 각 3명 ▲한국도자재단·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연구원·킨텍스 2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본부장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31명이며, 대표이사·단장·사장 등 기관장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17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강 의원은 “퇴직 공무원 모두 본부장급과 기관장으로 재취업했는데 이들이 모두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재취업하게 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11.1 X 14.2 cm

공사-공단 해석차가 만든 '1천억 세금폭탄'

도내 11개 도시공사, 1036억 세금 추정 '날벼락'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시·군서 '부가세 면제' 받은 탓
지자체 "차이 없다" 국세청 "다르다" 법령 해석 결과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공사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천억원 대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들이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사와 공단이 차이가 없다고 판단,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로 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안산도시공사 등 도내 11개 공사에 총 1천36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24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안산도시공사 164억원, 광주도시관리공사 132억원, 용인도시공사 122억원, 화성도시공사 11억원 등이다. 성남도시공사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도시공사가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은 해당 법령을 놓고 시·군과 국세청의 해석이 달라서다.

해당 시·군들은 사업수행을 위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공사와 공단이 차이가 없다고 판단, 이들 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다.

반면,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들 공사들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5년치 누적분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강 의원은 "도시공사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공익시설물 이용요금 상

승 등으로 시민부담이 증가하고,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시공사협의회와 함께 지

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자체 사업을 대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행정자치부 통합권고에 따라 통합된 기관은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안경환기자 jing@
23.8 X 14.1 cm

김영진 軍공항 이전 엇나간 과정 꼬집어

도시재개발 매몰비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도정과 지역현안에 대한 폭넓은 질의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5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수원·대구·광주가 지난 2014년도에 이전에 대한 준비를 비슷하게 출발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신공항에 대한 방안을 추진한 지 한달 만에 대구에 군

공항 이전이 추진됐다"며 최근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엇나간 과정을 꼬집었다.

이어 "수원시는 주민합의와 수정·보완 등을 통해 지난해 5월 이전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여부를 받았고, 광주광역시도 지난 8월 조정·심의 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부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대구는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조정·심의에 대한 진행이 없음에도 군 공항 이전이 시행됐다"며 날을 세웠다.

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광교신철사 이전과 도시재개발 사업의 매몰



비용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수원 고등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개발 사업 등

도내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개발 사업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철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해법을 촉구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도가 이제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15.2 X 8.2 cm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경신기자 mono316@

남경필 '연정'에 빠진 국감... 대선 행보엔 '경계'

국회 안행위, 경기도 국감

'연정(연합정치) 효과' 때문일까. 아니면 5선 출신 남경필 지사의 노련함에 회롱(?)당한 것인가.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연정에 빠진 물감'에 그쳤다.

비판이 쏟아지고 당색이 명확한 여느 국감과는 달리 여야 간 '피아식별'조차 되지 않는 맥빠진 질의가 약 4시간 30분에 걸쳐 지루하게 이어졌다. 여야 모두 도정 곳곳을 꼼꼼히 묻고 따지는 '감사' 역할은 외면한 채 모병제·핵 무장과 대권용 인재 영입 논란 등 차기 잠룡으로 떠오른 남경필 지사를 겨냥한 '원포인트(one point) 검증에만 열을 올렸다.

■ '연정' 덕 톡톡히 본 경기도 국감

이날 경기도 국감장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모두 경기 연정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 22명 중 새누리와 더민주의는 각각 10명, 9명을 차지하며, 나머지 3명은 국민의당 소속이다.

더민주 백재현(광명시갑) 의원은 "경기도 연정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바꾸고, 헌법 틀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막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연정 찬사' 쏟아내며, 송곳 비판 외면 4시간 30분 맥빠진 질의

대권용 인재 영입 등 잠룡 부상 南 지사 조준 "대권에 몰두할 거면 지사직 내려놔야" 직격탄

시작한 연정 2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같은 당 표창원(용인정) 의원은 "연정을 도입해 협치에 모범을 보인 것에 감사하다"며 여당 광역단체장을 향한 이례적 호의를 드러냈고, 김정우(군포갑)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를 비판하며 "(연정) 더민주 의원들과 소통하는 좋은 모델이다"이라며 남지사의 연정을 치켜세웠다.

새누리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연제) 의원은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와 경기도의회를 비교하며 "정치적 실험인 연정은 의미가 크다"라며 협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앞으로 광역의회에 보좌관제 등을 도입해 연정의 내실을 기하길 바란다"며 남지사에게 힘을 보탰다.

국민의당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연정은 자치분권으

로 가는 길로 기대가 크다"며 연정 찬사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이날 예상과 달리 '화기에 예'한 국감이 계속되자, 새누리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연정 때문에 야당의 공격이 무대진 것 같다"며 의미 섞인 발언을 야당에 던지기도 했다.

■ 대권 고민 남지사에 여야 모두 '냉대'

여야 모두 연정에는 호의적 태도를 보였지만, 남지사의 대선 행보에는 '경계'의 눈초리가 이어졌다.

새누리 황영철 의원은 최근 남지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과 관련, "모병제를 실시하면 돈 없고 백 없는 젊은이들만 군대에 가지 않겠느냐"며 모병제가 '금수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민주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남지사의 안보 관련 발언은 대선주자 행보"라면서 "한반

도 전술핵배치는 반대하면서도 핵보유는 필요하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최근 남지사가 던진 핵 보유 발언을 문제삼았다.

대권용 인재 영입 의혹에도 날을 세웠다.

새누리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자무크(G-MOOC) 단장에 윤여준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혹자는 대선 정치고문으로 모셨다

는 말을 하고 있다"라면서 "(윤 전 장관이) 이러닝이나 콘텐츠 사업에 과연 전문가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장정숙(비례) 의원은 "도지사는 대권 행보에 질 사람이 아니다. 도정을 내팽개치고 대권에 몰두할 거면 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남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홍성민기자 hsm@

25.5 X 28.3 cm

도내 주택 10곳 중 9곳 '지진 무방비'

종합상황실도 36.4% 내진설계 안돼

도 내진설계 7만9280동

경기도 주택 10곳 중 9곳이 지진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와 국민안전처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주택 61만4천188동 중 내진 설계된 곳은 12.9%인 7만9천280동에 그쳤다.

주거 형태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0만3천603동 중 4만9천289동(47.5%)에 내진 설계가 적용된 반면, 전체 주택의 약 83%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은 51만585동 중 2만9천991동(5.8%)에 그쳤다.

주택 외 시설도 전체 건축물 48만4천991동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3만7천525동(7.7%)에 불과했다.

학교는 7천27동 중 1천612동으로 22.9%, 동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은 4천358동 중 480동으로 11%로 파악됐다.

특히 지진재난상황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의 경우 도내 33곳 중 12곳(36.4%)에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에 운영 중인 재난상황실 2곳과 경기소방본부 상황실에도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처럼 도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가 미진하지만 지난해 내진보강 계획대비 추진은 계획한 63건 중 15건(23.8%)만 처리했다”라면서 “지진재난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종합상황실의 100% 내진확보와 함께 저조한 내진보강 실행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경기신문

홍철호 경기도지사의 장관급 격상 주문

접경지역 지원책 개선 요구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지사의 장관급 격상, 접경지역 지원의 형평성 제고 등 경기도 난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홍 의원은 이날 “경기도는 1천 300만이란 거대한 지자체로서 그에 걸맞게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는 차관이고 서울시장은 장관급인데, 이것

은 불합리한 것”이라면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당연참석인데도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럴 바에는 서울시장은 그 권리를(국무회의 참석) 경기도지사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가 수년째 국회 등을 향해 요구하고 있으나 답보 상태에 놓은 ‘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주장을 홍 의원이 나서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난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책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김포는 사실상 북부인데 서부로 분류돼있고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 같은 접경지역임에



2016년 10월 06일 (목)
03면 종합

도 지원 편차가 크다”라면서 “최근 5년간 2만여명이 거주하는 강원도 양구군은 189억 원을 지원받은

반면 36만여명이 거주하는 김포는 70억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의 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역구인 김포내에서 여야 없이 시·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등이 단합대회를 갖고 협업하고 있다. 경기도 연정이 모델 케이스가 됐다”며 연정의 중앙 확대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슬하기자 rachel@

15.2 X 8.6 cm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공간 속에 나를 발견하다

경기도미술관 '공간의 발견' 내년 8월 27일까지 전시

작년 '색' 이어 '공간' 주제로 사진·회화 등 소장품 20여점 선보여
몸·삶터·상상 3개 섹션 구성... 미술체험교육 '꿈틀 교실'도 운영



장성운작 '비스콘티 길'



박용석작 '서울 모더니즘'



박용석작 '부산 모더니즘'

미술로 표현된 공간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의 발견' 전시가 내년 8월 27일까지 경기도미술관 공물전시장에서 열린다.

공간은 사유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인해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위해 미술의 기본 요소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한 경기도미술관은 지난해 '색'에 이어 '공간'을 주제로 전시, 공간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몸으로 발견하는 공간', '내가 사는 공간', '상상으로 만드는 공간' 등 세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전시는 사진,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여점을 통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다.

장성운은 도구가 아닌 사람의 몸으로 공간의 길이를 측정할 기발한 시각을 작품에 담았다. 비스콘티 길의 너비를 19명의 사람이 측정할 '비스콘티 길'은 누구와 언제 머물렀는지에 따라 공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표현한다.

두번째 섹션의 '서울 부산 모더니즘'은 평범한 삶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다. 현대의 도시 공간을 탐색한 박용석 작가는 서울, 부산의 물탱크의 위치를 섹점으로 표시, 또 하나의 이색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어냈다.

유에프오가 미국 의회 의사당을 뱀도는 가운데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오용석의 '미래의 기억'은 '상상으로 만드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공상과학 영화 장면과 실제 일상 풍경들을 조각조각 붙여 완성한 이 작품은 사실과 허구가 혼재, 작가가 상상하는 미래의 기억을 담았다.

소장품 전시 외에도 디자인 프로젝트 그룹 썬오엠(COM)의 공간 체험적 설치 작업과 문재원(Jaye Moon)의 레고 문들로 연출된 미로 조각, 한광우의 거울 효과와 불꽃 오브제 등 공간과 어우러진 작품도 전시된다.

뿐만 아니라 불꽃을 활용한 상설 체험 공간이 마련됐으며 기관 및 단체 관람객을 위한 미술 체험 교육 프로그램 '꿈틀 교실'도 전시 기간 동안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gmo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경화기자 mkh@

29.9 X 22.8 cm

아동학대 신고 ‘깡충’... 학대전담 경찰관 태부족 ‘헉헉’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 국정감사 자료

작년 검거건수, 경기도 33% 차지... 전국 1위 오명
경찰 1인당 남부 31건-북부 38건 처리 ‘업무 과중’

“인력부족 심각... 관련기관과 공조체계 구축해야”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차지했다.

하지만 학대 전담 경찰관은 인력이 부족해 담당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전체 1천754건이며, 이 중 경기도가 579건(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서는 지난 7월 기준 전체 1천 509건, 경기도가 416건(27.5%)었는데, 학대전담경찰관(APO)은 경기남부에 72명, 북부에 1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동학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관련 신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경기남부 2천228건, 북부 606건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2.6%, 113.4% 증가했다.

이로 인해 학대전담경찰관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은 경기남부 31건, 북부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담경찰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대전담경찰관은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 가정폭력, 서무 등의 일도 겸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기남부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즉 긴급임시조치(행위의 제지, 행위자 격리 등)는 9건, 응급조치(행위자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는 23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50%, 41.3% 줄었다.

또 월 1~2회, 반기에 1회 전화 또는 방

문해야 하는 학대위험 아동 모니터링 대상은 경기남부 631명, 북부 132명으로 신고 건수와 비교할 때 관리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학대전담 경찰관이 1인당 3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경찰이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훈기자 lsh@
29.8 X 16.6 cm



남경필 경기지사가 5월 수환시 물
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
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
다. 오른쪽은 같은 날 수원시 장안
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남·북
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
에 답변하고 있는 정윤선 경기남부
청장과 서병수 경기북부청장.
홍승남 기자
nam1432@khoilbo.co.kr

경기도 국감 = 남 지사 대선검증대

안행위, 모병제 전환·핵 무장론 등 집중 질의... 여당서도 우려 제기
'수도 이전' 道 경쟁력 약화 지적... 대권 출마 질문엔 南 "내년 초 결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5일 열린 가운데 '경기지사'보다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남경필 경기지사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관련 기사 3면>

특히 여단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까지도 남 지사가 화두로 꺼내는 '모병제'와 '핵무장론' 등 각종 국방·안보 이슈에 질의를 쏟아내며 우려를 제기했다.

가장 많은 질의가 집중된 것은 남 지사가 접화한 '모병제 전환론'이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모병제는

결국 돈·백 없는 젊은이만 군대를 가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오하리 급수지 논란, 사회적 계층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모병제는 단질 때 주객이 전도됐다"며 "복합을 제압할 병력과 무기 고도화, 방어체계 개선 등 국방 개혁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어야 한다. 마치 모병제를 위해 군사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남 지사는 "새 대통령이 '군대 안 간 사람 장·차관 안 쓰겠다. 새누리당 공천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하게 국가적 어젠다로 세우면, 그런 사회를 만들면 급수지 논란을 빚어날 수 있다"며 "군사체제 개편은 좋지만 국민적 공감에 쉽지 않다. 하지만 모병제는 이를 바꿔 나갈 트리거(trigger)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남 지사가 가장 최근 들고 나온 '핵무장 준비론'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핵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의 경고와 고압이 있을 것이고, 북한과 같은 체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핵 준비를 해 보

겠다고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체재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해 태야불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꼭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아니냐"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수도권의 지사가 수도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도리어 경기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며 남 지사의 '수도 이전' 주장을 질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남 지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내년에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부동호가 출마 쪽인가"라는 새누리당 총재의 질문에 "내년 초 결정하겠다. 아직은 이른바"라며 어느 때와 같이 측답을 피했다.

남경필 기자 why0524@khoilbo.co.kr

35.4 X 20.4 cm

도 '청년수당' 무상·이중복지 아닌가

2016년 10월 06일 (목)
01A면 종합

국감서 "서울시와 차이 뭔가" 질타
남지사 "직접적 구직 활동만 지원"

여야 충분한 논의 통해 만든 정책
집행부 큰 리스크 없다 입장 밝혀

2기 경기연정(聯合政) 정책합의문에 포함돼 도입이 추진되는 '경기도형 청년수당'(청년구직지원금)을 둘러싸고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우려 섞인 질의가 쏟아졌다.

5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원호 의원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서울시를 상당히 의식한 것 같다"며 "이게 서울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 잘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도 청년수당에 대한 서울시와의 차이점을 묻자, 남경필 지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박원순

시장이 좋아서 웃은 건 줄 알았다.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듯하다"며 "우리는 더 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시원한 토론을 해 결과물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은 바우처나 카드로 후지급하는 경기도형 청년수당과 관련해 "(남지사 방식)청년들에게 물으면 웃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경기도형 청년수당이 가져올 이중 복지 또는 무상 복지 논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청년수당이 2차 연정 합의를 통해 도입됐는데 이중 복지, 무상 복지를 두고 논란"이라며 "성남시나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각하다. (남 지사는)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행동에 지원할 생각이다.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갖고 목적에 맞는 몇 가지 교육행위에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이 청년구직지원금의 특징점을 묻자 남 지사는 경기도·

서울시·성남시와의 청년수당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접적 구직활동에만 지원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도가 2차 사업에 들어가는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도 당초 사업 목표를 500명에서 최근 1만 명으로 급격하게 확대한 것을 두고 '남경필 장학생'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해 보니까 (효용)너무 좋았기 때문에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hihoilbo.co.kr
23.3 X 9.5 cm



골목 상권 살려보자 배움 열정 상인 50명 자랑스러운 학사모

동두천 소상공인 대학 졸업식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손을 잡고 경기북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중기센터는 5일 오후 3시 동두천시 두드림희망센터 3층에서 '2016년 경기북부 동두천시 소상공인 상인대학 졸업식'을 열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상인대학 졸업식에는 졸업생 50명과 홍석우·박형덕 도의원, 김관수 중기센터 북부기업지원센터 본부장, 정혜숙 서민경제본부장, 장영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동두천시 상인대학 졸업생은 지난 8월부터 점포 경영 기법과 점포 운영 전략, 시장 및 점포 활성화 전략 등을 40시간에 걸쳐 교육 받았다.

졸업생 50명은 윤종일 중기센터 대표이사가 수여하는 졸업장을 받았으며, 우수 졸업생 4명은 중기센터 대표이사 표창(2명)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2명)을 수상했다.

윤종일 대표이사는 "이번 상인대학이 경기북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두천시가 북부 지역 상권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인대학 교육과정에 참여한 김금자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규모가 작아도 시장의 흐름과 대처 방법을 알고 대응하면 대형 점포와의 경쟁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졸업소감을 전했다.

한편, 중기센터는 졸업 후에도 교육 참여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해 사후 관리에 더욱 힘을 계획이다.

이번 졸업식 및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소상공인 지원센터(☎031-888-0914)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민간건물 내진율 13.8% 불과 경기도, 지진 종합대책 절실

국회 안행위, 국감서 지적
남 지사 “비용 지원안 마련”

지난달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전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지진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은 “경기도내 주거시설, 종교시설 등 민간시설의 내진율이 미비한데도,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비책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은 13.8%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등의 주거시설 13.6%, 종교시설 15%, 시장 등의 상업시설 28%, 교육연구시설 32%, 병원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479곳의 병원 중 5.6%인 27곳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진 의원은 “경기도가 향후 5년간 9곳의 종합병원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38억 원을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매년 한 곳당 8천500만 원으로 종합병원의 내진 보강공사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고 꼬집었다.

도내 활성단층에 따른 대책 마련 주문도 이어졌다.

더민주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수도권 지역의 추가령 단층대가 경기 북부와 서울을 가로 질러 충북지역까지 뻗어있다. 여기에 동두천 단층, 동송 단층 등이 의정부로 모아지고, 왕숙천 단층이 서울, 구리, 성남까지 발달돼 있다”며 지진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건물 내진 설계를 건물주가 직접할 경우, 도에서 비용 부담을 일부 해주는 지원 정책을 통해 내진율을 높여 나겠다”고 말했다.

강나흠 기자 hero43k@kihoilbo.co.kr

9.9 X 15.2 cm

5000만 원 ‘비단잉어’ 보러 가 볼까

**안성 공도읍 양식장서 9일
전국 20여 어가 참여 품평회**

전국 유일의 비단잉어 품평회가 오는 9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안성 비단잉어양식장에서 열린다.

경기도해양수산물자원연구소와 ㈜안성비단잉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관상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비단잉어 양식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품평회에는 경기·충청·강원 등 전국에서 20여 개 비단잉어 양식어가가 참가해 우수한 비단잉어 70여 마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품 비단잉어의 체형, 색상, 무늬, 건강, 혈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비단잉어를 시상할 계획이다.

20~50년 이상 사는 비단잉어는 부와 장수의 상징이자 아름다운 외관으로 관상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는데,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품평회에서는 1천800마리가 출품된 가운데 1마리에 10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비단잉어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비단잉어의 80% 이상을 동남아와 유럽에 수출해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5일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품평회에도 5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급 비단잉어가 출품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백·황금·삼색 등 다양한 색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비단잉어를 볼 수 있는 기회

이기도 하다.

㈜안성비단잉어 이태은 대표는 “최근 도시화와 국민소득 증가로 관상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품평회는 비단잉어를 민간에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해양수산물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협의체 구성, 연구 지원 강화 등 비단잉어 시장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구소는 현재 100여마리의 어미 비단잉어를 육성하고 있으며, 매년 7~10월 사이 3천여 마리의 비단잉어 치어를 도내 양식어가와 희망자 등에게 시중의 3분의 1 가격(1마리당 500~1천 원)으로 유상 공급하고 있다.

강나흠 기자 hero43k@khihoilbo.co.kr

15.0 X 12.3 cm

도내 산하기관 ‘관피아’ 여전...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대책을

국감 첫날 도정 전반 질의 쏟아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5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 사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도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3개 관변 단체 예산 지원 형평성 우려 등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진(수원병)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결정의 리더십”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원·대구·광주시 군공항 문제는 2014년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이후 대구 군공항 이전이 특별히 주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6월 국방부로부터 군

수도권 군공항 이전 문제 관련 남 자사 ‘결정의 리더십’ 필요 새마을회 등 이중 지원 지적도

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받았다. 이는 2013년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군공항 이전과 관련 해 결의 보탬을 만든 전국 최초의 사례다.

광주 군공항도 올 8월 이전 첫 관문을 넘었다.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열어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평가한 결과, 총점 1천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 ‘적정’으로 판정했다.

이 과정에 대해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제출, 수정 보완 후 조정 심의를 거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김 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전 과정에서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남 자사에게 결정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의원=경기도내 농업용 저수지 수질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전국 975개 저수지 수질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조사 대상 56개 저수지 중 25개(44.6%)로 증가해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수질 악화 저수지가 3년 새 두 배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 6곳, 안성시 4곳, 용인시 3곳으로 많았고 이천과 양주시 2곳, 양평·연천·파주·군포·의왕·시흥·평택이 각각 1곳이었다.

▶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암·영덕·봉화·울진)의원=경기도 퇴직공무원들의 도내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급(서기관) 이상 퇴직공무원 59명이 2012년부터 올 7월

농업용수관리 권고기준을 4등급으로 정하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저수지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4등급 수질 초과시설은 2013년 55개 중 11개(20%), 2014년 55개 중 17개(30.9%), 2015년 56개 중 25개(44.6%)로 증가해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수질 악화 저수지가 3년 새 두 배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 6곳, 안성시 4곳, 용인시 3곳으로 많았고 이천과 양주시 2곳, 양평·연천·파주·군포·의왕·시흥·평택이 각각 1곳이었다.

▶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암·영덕·봉화·울진)의원=경기도 퇴직공무원들의 도내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급(서기관) 이상 퇴직공무원 59명이 2012년부터 올 7월

까지 17개 산하기관에 들어갔다. 연도별로 2012년 11명, 2013년 15명, 2014년 15명, 2015년 9명, 올해 들어 7월까지 9명 등이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북지재단이 8명씩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명, 경기영어마을·경기콘텐츠진흥원 4명, 경기관광공사·경기농업진흥재단·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테크노파크 각 3명, 한국도자재단·경기평생교육진흥원·경기문화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연구원·킨텍스각 2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명 등이다.

재취업한 직급은 본부장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표이사·단장·시장 등 기관장도 17명이나 됐다.

▶ 더불어민주당 전선미(서울 강동갑)의원=경기도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관

변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각 부서별로 이중·삼중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4억6천719만 원이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2배가 넘는 9억3천856만 원이 각종 명목으로 지원돼 온 것으로 분석했다.

도 새마을회는 지난해 2억6천286만 원에서 올해 5억5천536만 원,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도 1억5천만 원에서 2억5천500만 원, 자유총연맹은 5천433만 원에서 1억2천814만 원으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2~3배가량 늘었다.

지원된 예산은 차량 구입과 건물 개·보수, 각종 대회 및 행사 참가, 연찬회 등에 쓰였다.

박광삼 기자 ksp@khlbo.co.kr

35.4 X 13.5 cm

김포 평화누리길 누비는 자전거투어 22일 개최

가을빛 한강철책길 따라 통일 희망 품는다

경기도는 오는 22일 김포 평화누리길 3코스 한강철책길에서 '2016 평화누리길 자전거 투어 in 김포'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류리포구 인근 연병장에서 출발해 석탄배수펌프장, 한강변 철책선길을 거쳐 후평리 철새도래지를 지나 다시 전류리포구 인근 연병장으로 돌아오는 약 18km의 순환형 단일 코스로 운영된다.

높낮이가 완만한 쉬운 코스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코스 인근의 주요 명소로 천연기념물 제250호로 지정된 수도권 최대 철새도래지인 '후평리 철새도래지', 한강의 최북단 여장으로 북한의 개풍군과 마주하고 있는 '전류리포구', 북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애기봉 전망대', 차의 아버지 한재 아목 선생의 위패를 모신

'한재당' 등 다양한 역사·자연·문화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이밖에도 평화누리길 사진 전시회, 엽서 쓰기, 포토타임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되며,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간식 등이 제공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13일 오후 5시까지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로 신청하면 된다. 30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 코스는 김포평야의 너른 들과 한강 너머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가을의 정취와 통일의 희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며 "DMZ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만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4.0 X 14.9 cm

아동학대, 경기도서 최다 발생... 지난해 579건 '전국의 33%'

아동학대 사건이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을 맡는 학대전담경찰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기남부경찰의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새)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검거 건수는 전체 1천754건이며, 이 중 경기도가 579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기준 전체 1천509건 중 경기도가 416건(27.5%)에 달한다. 그러나 학대전담경찰관(APO)은 경기남부에 72명, 북부에 16명만이 배치돼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져 신고가 급증하고 경찰관 1명이 이를 처리하는 사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학

대전담경찰관은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 가정폭력, 서무 등의 일까지 겸하고 있어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즉 긴급임시조치(행위의 제지, 행위자 격리 등)는 9건, 응급조치(행위자 퇴거·격리, 접근금지 등)는 230건으로 작년 동기기간보다 각각 50%, 41.3% 줄었다. 반면 북부는 각각 150%, 16.7% 늘었다.

황 의원은 "학대전담경찰관이 1인당 3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경찰이 관련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연규 기자 sims@kihoilbo.co.kr

10.7 X 11.0 cm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ksy9@incheonilbo.com

“사드 배치·모병제·핵무장론 남 지사, 대권주자 발언 같다”

안행위, 집중 질의...南 조목조목 답변

오늘의 국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드배치, 모병제, 핵무장론이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관련 기사 2·3·4·18·19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사의 발언을 보면 사드배치, 모병제 도입, 핵무장 등이 대권주자의 발언으로 들린다”며 “7월 사드문제 발생시 평택 등에 배치를 찬성한다고 했는데, 정부에 동의한다는 것이냐. 도민들의 뜻이냐”고 따져물었다.

남 지사는 “경기지사로서 군 전력의 60%가 경기도에 있고, 국방문제는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주와 김천에 사드 배치가 확정됐다. 제2의 사드가 오산과 평택에 배치되면 환영할 만한 일인가”고 되물었고, 남 지사는 “배치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핵보유 발언이 국제적 경

고와 국제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핵무장을 선언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핵을 준비하겠다는 단계에서는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그 둘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저는 핵무장을 꼭 하자는 것은 아니다.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핵을 동결시키면서 평화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간 평화회담의 급물살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모병제와 수도 이전을 지사가 언급하는 것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 핵무장에도 우려가 있다”며 모병제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남 지사는 그러나 “현재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이 안전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가. 수도이전 역시 비정상적인 해결이다.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인식이 바뀌어 언제 핵우산이 사라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기상황에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느냐”는 새누리당 박순자(경기

안산단원)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남 지사는 “9급 공무원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100% 취업이다. 군을 통해 선발을 하고 제대할 때 줘지면 8000만원 종자돈이 생겨 사업을 할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 대학 2학년 편입과 학비 감면 등 정책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은 “모병제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파생적인 얘기다. 북한 병력이 2배나 많다. 헬기 외에는 북한이 압도적인 군사우위다. 여기에 북한의 핵이 있다”며 “모병제 대신 확실하게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개혁 틀을 만든 뒤 그 틀속에서 군인이 몇명 필요하냐 논의해야 한다”고 되물었다.

남 지사는 이에 “개헌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선거구제를 개편해 놓으면 개헌까지 갈 수 있다”며 “군사체제 개편은 좋은 것이다. 모병제가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연태 기자 myt@incheonilbo.com

17.5 X 31.8 cm

도 운영 '스마트폰 앱' 절반 무용지물

16개 중 7개 1000명도 이용안해...시·군은 더 저조
황영철 의원 "무분별 제작...예산 낭비 소지" 지적

경기도가 운영중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44%가 사용자 1000명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운영 현황자료'(201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도는 2010년 5월 '경기도교통정보' 앱을 시작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119' 등 16개 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앱 가운데 '경기지역사

회서비스', '경기도119', '도시텃밭 영농일지', '경기도미술관', '문화나루', '동탄호수공원', '스마트큐레이트' 등 7개앱(전체의 43.75%)은 이용자가 1000명 미만이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 이상 1만명 미만 앱은 '120 경기도콜센터', '경기교통정보', '경기도택시안심서비스', '경기평생학습포털길', '경기문화창조허브' 등 5개 앱이었다.

1만명 이상 앱은 '경기부동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경기버스정보

2' 등 3개앱에 불과했다.

시군에서 제작운영중인 앱은 이용도가 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앱(80개)의 56%인 43개가 이용자 50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특히 인천시의 '길따라 떠나는 여행', '명품길', 화성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남양주시의 '두드림 톡' 등은 이용자수가 10명도 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은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계획이 수립된 2011년 이후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한 최신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제작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원태 기자 myt@incheonilbo.com

17.5 X 10.9 cm

소방차량 5분 이내 도착률 37%

전국 꼴찌서 두번째

경기도내 소방차량의 5분 이내 화재 등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3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경북 30.3%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차량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37.6%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소방차량의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전국 평균이 58.5%인 가운데 서울이 8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부산 82.7%, 대구 80.0%, 충남 77.0% 순이었다.

또 도내 법적 소방인력 기준이 8990명인데 현재 정원은 5231명으로 41.8%(3759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소방인력 부족률은 항공 구조구급대 71.2%, 지역대 51.5%, 119안전센터 44.7%, 119구조대 43.4%, 119구급대 27.5%이었다.

이 밖에 긴급차량 양보 의무 위반자 적발에 필수적인 블랙박스를 장착한 도내 소방차 및 구급차가 전체 1천17대 중 622대에 불과, 장착률이 55.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윤재옥 의원은 "1300만 인구가 있는 경기도 소방력이 인력부터 인프라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소방력 증대에 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원태 기자 myt@incheonilbo.com

11.6 X 10.8 cm

공공기관 재취업 한 퇴직공무원 수두룩

 경기도 국감

5년간 4급 이상 59명 이동...강석호 의원 “전문성 검증”

경기도시공사·복지재단 각각 8명 - 본부장급 31명 ‘최다’

최근 4년 사이 경기도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가운데 59명이 도내 산하기관에 본부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공공기관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

누리당 강석호(경기 영남·영덕·봉화·울진)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 및 시·군 부단체장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명, 2013년 15명, 2014년 14명, 2015년 9명, 2016년 7월까지 9명 등 모두 59명(60회)이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복지재단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6명, 경기과학기술진흥원 5명 등의 순이었다.

직급은 본부장급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표이사·단장·사장 등 기관장도 17명이나 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 산하기관은 ‘공직

자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재취업자 대부분이 1~2개월 내에 정해진 자리에 옮겨가듯 재취업했다.

강 의원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모두 산하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재취업했는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재취업하게 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산하기관들의 부실·방만 경영이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퇴직공무원의 도피처로 전락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문한태 기자 myr@incheonilbo.com
29.2 X 9.8 cm

보름에 한 번 공무원 범죄

2012년~올 8월 90건...미발생 시·군·구 ‘0’

최근 4년여간 보름에 한번 꼴로 경기도 공무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공무원 범죄건수는 경기도청 공무원 9건, 시·군 공무원 81건 등 모두 90건에 이른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69건, 절도 19건, 살인 1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성남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평군(8건), 고양시(8건), 수원시·군포시(4건)가 뒤를 이었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파주시 A공무원의 경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경기도청 공무원은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절도를 저지르는가 하면 고양시 공무원은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 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청 및 시·군의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공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기강해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은기·최현호 기자 50eunki@incheonilbo.com

11.5 X 11.2 cm

새마을회 등 3개 관변단체에 혈세 평평

진선미 의원 “도, 예산 중복 지원 ... 차량구입비도 선뜻”

국감 현장

경기도가 경기도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경기지부 등 3개 관변단체에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2중 3중으로 중복 지원하고 운영비와 차량구입비, 행사비 등 지원하지 않해도될 예산까지 써가며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 경기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4억6719만원이었지만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2배가 넘는 9억3850만원이 각종 명목으로 지원됐다.

새마을회는 지난해 2억6286만원에서 올해 5억5536만원, 바르게살기는 1억5000만원에서 2억5500만원, 자유총연맹은 5433만원에서 1억2814만원으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2~3배 가량 급증했다.

지원 내역을 보면 경기도는 3개 국민운동단체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난

올 9억3850만원 ... 전년比 2배 ↑

해 3개 단체에 2억9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7억2450만원으로 지원금이 2.5배나 늘어났다.

특히 자유총연맹 경기지부는 올해 처음 5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지원된 예산의 세부 명목은 차량 구입과 건물 개보수, 각종 대회·행사 참가, 연찬회 등 지원하지 않아도 될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업무는 경기도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이 담당하고 있다.

또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조례에 근거해 사회단체 육성과 경기도 권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관변단체에 사무처 운영비와 각종 대회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1억7719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올해는 일부 보조금이 줄어 1억3296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개 단체는 13개 사업비로 8104만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보다 지원금이 증가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담당관 문화교육예산팀에

서 맡고 있다.

한편 3개 관변단체는 관련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조세감면혜택도 받고 있다. 행자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3개 관변단체의 사업 지원금 독식과 중복지원 문제를 없애기 위해 2010년부터 3개 단체지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비영리단체지원사업 공모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단체 지원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3개 관변단체에 무상 공공건물에 사무처 운영비 지원 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과 각종 크고 작은 사업·행사 비용까지 과도하게 중복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단체 지원사업들의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특혜성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17.5 X 17.6 cm

연정 효과·막힘없는 답변 ... 경기국감 간만에 통했다

국감 브리핑

5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감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가 하면 피관기관장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시종일관 미소를 띠는 여유를 부리는 등 평소 보기드문 일들이 벌어졌다.

▲남경필 내년 1월 대선 출마 결정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각종 질의를 여유 있게 답변하며 무난하게 국감을 마무리했다. 이날 남 지사는 안행위 의원들이 지적하는 각종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거나 지적된 문제에 시장의 뜻을 바로 표하는 등 시원하게 대응했다. 남 지사는 내년 1월 대통령 출마 결정 시 도지사직을 버리고 갈 것인지 묻는 강석호 의원의 질문에 "그것은 그때 강석호 의원님과 같이 상의하겠다"고 말해 곤란한 질문을 재치있게 빠져나갔다.

또 남 지사는 전선미 의원이 질의한 소방관의 처우와 노후화된 산소통, 공기충전기 등의 문제에 대해 "예산을 투입해 다 교체하겠다"고 화답했고, 전선미 의원은 "답변이 시원하신다"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이에 남 지사는 "소방관들 근무환경을 위해 획기적으로 종합대책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지사, 소방관 처우개선 질문 "예산투입 다 교체"

대선출마 등 곤란한 질문은 '재치'있게 피해나가

의원들 의례적 자리 꼭 채워 - 분위기 '화기애애'

이 내용도 꼭 실현하겠다"고 약속해 진정성을 보였다.

그러자 유재중 위원장은 "전선미 의원이 (남 지사)가 시원하게 답변하시는 것만 질문하시는 것 같다"고 해 각종 질의로 남선 국감장에 웃음을 아꼈다.

특히 전날인 4일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을 사후 지급 하는 것과 관련 "남지사의 제안을 청년들에게 물으면 웃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청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나갔다.

이후 남 지사는 "박원순 시장이 잘못 파악한 듯하다. 경기도의 청년구직 지원금은 여야의 합의로 만들었고, 중앙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경기도 국감, 식사? 구내식당 vs 굿모닝하우스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22명의 의원들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경기도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유재중 위원장을 비롯한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12시30분쯤 오전 질의를 마친 뒤 남경필 지사, 이재을 행정1부지사, 양복완 행정2부지사, 강득구 안행부차사와 함께 구내식당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서 식사를 했다.

이날 식사는 밥과 미역국, 보쌈, 고등어조림 등 한식으로 마련됐고, 후식은 우유였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도청 구내식당 음식에 대해 "소박하고 깔끔하다. 맛있게 먹었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 경기도지사 공관을 리모델링해 도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한 '굿모닝하우스'에서 식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10시30분쯤 몇몇 의원들은 도청에서 약 1km 떨어진 굿모닝하우스 대신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로 도에 요청했고, 결국 굿모닝하우스에 마련된 식사는 다시 구내식당으로 옮겨와 점심식사를 하게 됐다.

이날 남 지사와 몇몇 안행위 의원들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산책 삼아 굿모닝하우스를 걸어서 방문, 야외정원 등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 꼭 채운 국회의원들, 연정 높게 평가 무난하게 넘긴 국감

사실상 국감 정상화 이틀째를 맞은 5일,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감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자리를 뜨지 않아 눈길을 모았다. 첫 국감은 해마다 낯선 지적이 이어졌던 것과 달리 연정 효과 덕분에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여파로 여야 갈등이 깊어져 국감이 파행된 것과 관련해 일부 국감장에서는 기싸움을 한 것과 달리 이날 경기도 국감은 비교적 평온했다.

안행위 의원들은 남 지사의 연정에 대해 다수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지방자치의 모델로써 발전된 2기 연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김정우 의원은 "경기도의 연정 협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고, 이윤호 의원도 "연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일보 기자 vadasz@incheonilbo.com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을 행정1부차사와 경기도 살·장들이 국감에 임하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의논하고 있다.

/김수현 기자 ksy92@incheonilbo.com

도내 내진시설 갖춘 주택 12.9% 뿐

“소방서 공기충전기 부실 ...경찰서 인력배치 불균형”

경기도청·경찰청 국감

경기도청과 경기도경찰청에서 5일 실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남경필 도지사의 대권행보와 함께 도내 대지진 안전 및 소방장비 개선, 치안대책 확대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의원은 경기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도내에 설치된 181개 위원회 중 1년 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31개(17%), 한차례 회의를 연 곳이 55개(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반면 건설기술심사위원회는 1년 동안 한 달에 6번꼴인 80회의 회의를 개최해 대조를 보였다며 위원회의 부실, 중복 운영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도내 전체 주택 61만4188동 중 지진발생시 내진이 확보된 주택은 12.91%에 불과한 7만9280동”이라며 “이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7.57%가 내진시설을 갖춘 반면 단독주택은 5.87%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학교는 7027동 중 22.94%인 1612동에 그쳤고, 동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도 4358동 중 11%만 내진이 확보된 상태인

데다 경기소방본부 상황실조차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은 “전국 소방서의 부실한 공기충전기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많은 161대가 부실충전기로 밝혀졌다”면서 “이 기기는 소방관의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은 경기 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경기경찰청이 전국에서 범칙금을 가장 많이 부과하지만 정작 소속 경찰들의 교통법규 위반 역시 가장 높다”며 그 이유와 대책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도내 1급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중 경찰인력이 과소 배치된 곳이 40곳에 이르는 반면 과대 배치된 지역도 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력 배치 불균형 해소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의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를 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4위, 2015년 13위를 기록하는 등 전국 최하위의 지표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위주의 치안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정찬홍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

13.6 X 16.3 cm

“서울시장은 장관 경기도지사는 차관...위상 제고를”

20대 국감스타
홍철호 새누리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경기 김포을·사진) 의원은 서울 시장은 장관인데 반해 경기도지사는 차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5일 열린 경기도 국정 감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경기지사님은 차관급인데 불만이 없느냐”고 재차 있는 질의를 했다.

이에 남 지사는 “주어진 역할대로 할 뿐 장관이나 차관 모두 일하는데는 제약이 없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저 같으면 불만이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홍 의원은 “조만간 경기도에 1700만의 인구가 모이는데 수도권에 약 3000만, 전국의 60%에 해당하는 인구가 모이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처럼 많은 인구가 모이면 전세값이 오르고 교통난, 환경오염 등 집중 피해가 발생할텐데 경기도지사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할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장관급이라 국무회



의 참석 대상에 포함되는데 경기도지사는 차관이라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경기도는 이제 1300만 거대한 지자체다. 걸맞은 위상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조정을 요구해 도민들의 자존심 지키고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에 필요한 문제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밖에도 김포시가 지리적으로 보면 경기도의 북부지역에 속하는데 행정상 서부지역으로 분류돼 접경지역 특별법에 따라 2만명이 거주하는 양주에 189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김포시는 70억도 못받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도의 배려를 당부했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파크의 민간투자를 잘 병행해 투자 유치를 받도록 신경써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G마크와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으며 경기도의 청년통장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문원태 기자 myt@incheonilbo.com

한 마리 5000만원 ‘비단잉어 품평회’

9일 안성양식장서

20여개 어가 참여

“비단잉어 한 마리가 5000만원 이라고요.”

전국 유일의 비단잉어 품평회가 오는 9일 안성시 공도읍 소재 안성비단잉어양식장에서 열린다.

경기도해양수산물자원연구소와 (주)안성비단잉어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관상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비단잉어 양식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품평회에는 전국에서 20여개 비단잉어 양식어가가 참가해 우수한 비단잉어 70여마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출품 비단잉어의 체형, 색상, 무늬, 건강, 혈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비단잉어를 시상한다.

20~50년 이상 사는 비단잉어는 부와 장수의 상징이자 아름다운 외관으로 관상어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는데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품평회에서는 1800마리가 출품된 가운데 1마리에 1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비단잉어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비단잉어의 80% 이상을 동남아와 유럽에 수출해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품평회에도 5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급 비단잉어가 출품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백, 황금, 삼색 등 다양한 색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비단잉어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주)안성비단잉어 이태은 대표는 “최근 도시화와 국민소득 증가로 관상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품평회는 비단잉어를 민간에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해양수산물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 협의체 구성, 연구지원 강화 등 비단잉어 시장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현재 100여마리의 어미 비단잉어를 육성하고 있다.

연구소는 매년 7~10월 사이 3000여마리의 비단잉어 치어를 도내 양어가와 희망자 등에게 시종의 3분의 1 가격(1마리 당 500~1000원)으로 유상 공급하고 있다.

/문원태 기자 myt@incheonilbo.com

11.6 X 19.1 cm